세종정책총서 2019-7

일본 자민당의 위기대응 연구: 일본 보수주의 분석(II)

››› 이면우 지음



세종연구소

일본 자민당의 위기대응 연구:

일본 보수주의 분석(II)

이면우

현재 세종연구소 부소장 겸 수석연구위원
서울대학교 무역학과(경제학 학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정치학과(정치학 박사) 졸업
현대일본학회 회장(2020-21)

【주요 저서】
『일본 보수주의 분석: 아베 재등장의 배경과 일본 정치의 향방』(2017), 『현대 일본 외교의 변용과 한일협력』(2011), 『포퓰리스트 리더: 일본은 왜 고이즈미를 선택했는가』(2006). 번역서로 『성공하는 리더십의 조건』(2012), 공저로 『'스트롱맨'의 등장과 영향력: 미중일러, 주변 4국 2018』, 『일본 민주당 정권의 정책성향과 대외관계』(2010), 『일본 NGO연구』(1998) 등.

【논문】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변화: 아베 외교의 현황, 영향, 전망"(2017), "일본의 다문화정책 변용과 그 함의"(2015) 등 다수.

일본 자민당의 위기대응 연구: 일본 보수주의 분석(II)

2020년 1월 10일 발행

지 음 | 이 면 우
발행인 | 백 학 순
발행처 | 세종연구소
주소 | (우) 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전화 | (031) 750-7615
팩스 | (031) 754-0100
홈페이지 | www.sejong.org
등 록 | 2001년 1월 19일 제1-26호
ISBN | 978-89-7429-564-6

※ 본 자료는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세종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세종연구소
세종정책총서 2019-7

일본 자민당의 위기대응 연구:
일본 보수주의 분석(II)

이 면 우 지음

세종연구소

서 문

일본 보수주의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질문은 일본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전후의 일본정치를 전공하는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안일 뿐만이 아니라 전후일본 자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이슈라고 하겠다. 이는 전후일본의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이 어떻게 장기집권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물음과 대체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이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 다량의 연구서적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이 물음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준다. 본 책자에서 이처럼 이미 많이 논의된 오랜 주제를 다시금 제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 기인한다.

첫째는 전후 일본의 보수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자민당이 2012년의 총선거를 통해 다시금 정권을 잡았다는 사실이 던진 충격 때문이다. 아베씨의 자민당 총재로서의 재취임이 비록 1955년 이후 처음 발생한 새롭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은 결국 파벌역학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하지만 2007년의 퇴임시 문제가 됐었던 아베씨가 보수주의적 아젠다를 내걸면서 총선거에서 자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일본에서 자민당 및 보수주의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은 다시금 각인시켜준 사건이었다.

물론 이처럼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자민당의 2009년 총선거 패배와 그에 따른 정권상실이 제1차 아베 내각에서 시작되어 드러난 기능부전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매우 컸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다. 1955년 이후의 38년간, 그리고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단독으로 또는 연합으로 집권할 수 있었던 자민당이기에 재집권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은 아니다. 특히나 어렵게 정권을 획득한 민주당이 정권운용에

미숙함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컸던 것 또한 사실이고, 고조되는 북한 및 북핵 위기도 자민당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자민당이 2009년에 정권을 상실했던 과정을 고려하면,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듯이 제1차 아베 내각과 후쿠다 내각, 그리고 아소 내각이 정치스캔들로 인해 각기 1년 정도씩 밖에는 유지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자민당의 복원력이나 유권자의 망각 및 용서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7년의 '일본 보수주의 분석'에서는 자민당의 구조, 아베라는 정치가의 리더십, 그리고 유권자들의 성향에 대해 검토하여 일본의 국가주의적 전통과 보수정당인 자민당의 정책적, 이념적 유연성이라는 두 가지를 일본 보수주의 및 자민당이 가지는 주요한 힘의 원천으로 제시했다.

둘째는 이러한 힘의 원천이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에 국한되어 새롭게 나타난 것인가 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서의 제목을 "일본 자민당의 위기대응 연구"라고 제시한 이유도 상기한 국가주의적 전통과 자민당의 유연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장기간의 자민당 집권기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점을 보기 위함이다. 즉, 자민당으로서 위기로 생각될 수 있는 사례들과 관련해 추진된 대응과정들에 있어서 자민당의 유연성과 국가주의적 전통이라는 요인들이 작용했는가를 검토한 것이다.

위기대응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는 일본 자민당의 당내 구조 및 정책결정과정이 확연히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자민당이 추구하는 우선적 목표나 가치 및 상황인식 등도 파악할 수 있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위기대응이라는 일반적 주제의 차원에서는

일본 자민당만이 아니라 일본정치가 가지는 특수성 및 일반성에 대해서 제시하는 바 또한 크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평가에 아낌없는 지적을 제시해주신 심사님들과 출판까지 기획된 기간 이상으로 연기되는 동안 인내로 기다려준 연구소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차 례

서문

서장 **일본 보수주의 연구: 문제 제기와 분석의 틀** ····· 9

1. 분석의 틀: 위기와 대응 ····· 12
2. 책의 구성 ····· 23

제1장 **안보조약 개정 소동에서 '소득배가' 정책으로** ····· 27

1. 위기상황: 안보개정 소동 ····· 30
2. 자민당 대응: 이케다 내각의 성립과 자민당 내 파벌역학 ····· 35
3. 결과: 1960년 11월의 제29회 중의원 총선거의 결과 및 그 함의 ····· 44

제2장 **'록히드사건'에서 '미스터클린' 총재의 취임까지** ····· 49

1. 위기상황: '다나카 금맥문제'라는 정치스캔들 ····· 51
2. 자민당의 대응: 미키 내각의 성립과 자민당 내 파벌역학 ····· 54
3. 1976년 12월의 제34회 중의원 총선거 ····· 60

제3장 **'동경 사가와규빈'사건에서 야당으로의 전락까지** ····· 65

1. 위기로서의 '동경 사가와규빈'사건과 그에 따른 당내분규 ····· 67
2. 대응으로서의 선거제도개혁과 그 좌절 ····· 71
3. 1993년 6월의 제40회 중의원 총선거 ····· 78

제4장 야당으로의 전락과 '自社さ' 連立政權의 성립 ····· 83

1. 위기상황: 야당으로서의 자민당 ····· 85
2. 대응으로서의 '自社さ' 연립정권 구상과 하시모토 내각의 성립 ····· 91
3. 1996년 10월 20일의 제41회 중의원 총선거 ····· 98

제5장 마무리: 일본 보수주의의 저력은 어디에 있는가 ····· 105

1. 저력으로서의 자민당 유연성 평가 ····· 107
2. 저력으로서의 보수주의적 일본 유권자 평가 ····· 111

참고문헌 ····· 115

서장

일본 보수주의 연구:
문제 제기와 분석의 틀

2019년 7월 21일에 진행된 일본의 제25회 참의원 통상선거는 아베 총리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요 미디어가 예상한대로,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구성된 연립여당이 과반수 63석을 초과한 71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안겼다. 자민당만을 놓고 볼 때, 동 당이 차지한 57석은 2016년의 참의원 통상선거 결과와는 유사한 수치이지만 65석을 차지했던 2013년의 선거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승리라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립여당을 형성하는 공명당의 성적을 합하면 71석이고, 헌법개정에 호의적인 일본유신회나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하면 헌법개정에 필요하다는 3분의 2 의석수인 85석에 근접한 결과였기에 자민당으로서도 결코 나쁘지는 않았다고 하겠다. 아베 총리가 선거후 헌법개정에 대한 신임을 얻었다고 해석하면서 헌법개정의 추진의사를 밝힌 것도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2019년 7월의 참의원 통상선거에서 나타난 일본 국민의 민의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아가는 미래에 대해 정치적 안정이라는 선호도를 보여주었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1] 이는 일본에서 자민당이 1955년에 형성된 이후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었던 요인의 주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지난번의 연구, '일본 보수주의 분석'(2017)에 이어서 일본의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일본 자민당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문제를 위기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탐구한다.[2]

---

1) 2019년의 참의원통상선거에 대한 분석과 관련해서는 간략하게나마 이면우, "미래불안을 정치안정으로 이겨내려는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 결과의 의미 및 영향," 『정세와 정책』, 2019년 17호를 참조바람.

2) 이면우, 『일본 보수주의 분석: 아베 재등장의 배경과 일본 정치의 향방』, (성남: 세종연

1. 분석의 틀: 위기와 대응

(1) 문제제기

2017년의 '일본 보수주의 분석'에서는 아베 총리가 다시금 등장해서 2019년 8월 현재까지 집권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검토했다.[3] 동 연구에서는 결론적으로 아베 총리 및 자민당의 정권복귀 및 장기집권과 관련해서 국가주의적 전통과 보수주의의 유연성의 두 가지를 제시했다.

국가주의적 전통이란 국내외적 정세변화에 대해 보수적인 대응을 선호하는 일본사회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언급하는 보수적인 대응이라는 것은 냉전의 붕괴나 중국의 부상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주되게 일본의 군사적 역할 및 국제적 공헌 증대를 추구하는 보통국가화와 미일동맹의 강화, 그리고 보수적인 교육의 강화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일본사회가 국내외적 정세변화에 대해 이와 같이 국가주의적 대응에 호응하는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명치유신 후의 일본 근대화가 국가주의적 전통 하에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즉, 외세의 침입과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라는 변화에 대해 명치유신 이후의 근대 일본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주의적 대응이 전통으로, 그리고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서구제국주의의 '동점'(東漸)에 대응해 명치정부는 행정, 교육, 산업의 서구화 및 근대화를 통해 일본의 독립성 및 서구추월을 추구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실패의 측면이 있었음에도 성공의 혜택 및 영향이 커서 일본을 하나로 하는 국가주의가 주요한 전통 및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소, 2017).

[3] 이면우, 상계서, 2017, pp. 163-166.

이와 관련해서는 또한 일본회의나 새역모와 같이, 보수적인 아이디어를 사회적 차원에서 유지하고 발전시켜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단체가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일본회의나 새역모는, 계급정당인 사회당과 연관된 노동조합연합처럼 자민당과 연계된 확고한 지지단체는 아니다. 단지 가치적 또는 정책적 방향이 같기 때문에 서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보수적 사회가 있다는 것은 보수정당이 되돌아 올 수 있는 주요한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수주의적 대응에 대한 일본사회의 호응은 또한 전후 일본에 있어서 자민당이 일궈낸 긍정적 평가와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전후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는 다양한 요인들이 제기되지만, 그 중에서도 자민당이 제공한 정치적 안정은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된다.[4] 물론 그러한 정치적 안정은 부정부패사건과 정치불신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여 1993년과 2009년의 정권교체를 경험해야 했지만, 1955년에 시작된 자민당일당우위체제가 제공한 정치적 안정은 2012년의 정권복귀를 가능하게 만든 밑그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제시한 보수정당의 유연성이라는 부분은 보수주의가 지닌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현실주의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자민당은 강령 등의 변화에서 보듯이 시대적 변화에 부응

[4] 전후 일본 및 그 경제성장에 대한 논의는 다대하다고 하겠는데, 그 중에서도 찰머스 존슨, 무라마쓰와 크라우스, 펨펠, 사무엘스 등의 논의를 참조바라며, 정치안정과 연관된 정당체계에 대한 논의로는 허브나르를 참조바람; C. Johnson,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Muramatsu Michio and Ellis Krauss, "Bureaucrats and Politicians in Policymaking: The Case of Japa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8, no.1 (March 1984), pp. 126-46; T.J. Pempel and Keiichi Tsunekawa, "Corporatism without Labor? The Japanese Anomaly," In Trends toward Corporatist Intermediation, ed. by Philippe Schmitter and Gerhard Lehmbruch,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79); Richard J. Samuels, *The Business of Japanese Stat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Ronald J. Hrebenar, ed., *The Japanese Party System*, (Boulder, Colo.: Westview, 1986).

하고자 노력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곧 유연성이고 자민당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캘더 교수는 자민당이 고도성장에 따라 발생한 환경문제에 의해 혁신지자체들이 나타나자 이에 적극 대처하고자 환경청의 설립 등을 통해 그 비난을 회피했는데, 이와 같은 예는 최근에도 소자화 및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양성평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담당대신 등을 제시하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5]

자민당의 이러한 유연성은 역시 다양한 리더들의 존재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자민당의 파벌들이 기본적으로 총재선거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각 파벌마다 특색이 있어서 그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모이게 되는데 이러한 가운데 리더들의 양성이 가능해지고 조금은 다른 색깔 및 아이디어의 리더들로 해서 시대적 및 상황적 요구에 걸맞는 유연성이 발휘된다는 것이다.[6] 파벌의 정책적 또는 이념적 성향 및 일체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보수세력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기시 전 수상의 파벌을 이은 후쿠다파와 국제적 현실주의를 대표하는 요시다 전 수상의 파벌적 맥락을 이어간 다나카파 또는 오히라파가 정책적으로나 이념적인 성향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파벌의 다양한 성향은 자민당으로 하여금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7]

---

[5] K. Calder, *Crisis and Compensation: Public Policy and Political Stability in Japan, 1949-1986*,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6] 일본의 리더십, 특히 자민당의 리더십이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바람: 이면우, "일본의 정치적 리더십: 리더십 유형과 정책성과의 연관성," 이면우 편, 『55년 체제의 붕괴와 정치변화』,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pp. 213-237.

[7] 일본정치 및 그 연구에 있어서 파벌이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크지만 파벌 자체에 대한 연구 보다는 자민당에 대한 연구의 일부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겠다. 이는 무엇보다도 파벌이라는 현상이 일본 문화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자민당 연구의 대표적인 작품인 사토(佐藤誠三郎)과 마쓰자키(松崎哲久)의 『自民黨政權』(1986)에 있어서도 파벌에 대해서는 당운영의 측면과 함께 논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자민당으로 하여금 유연성을 가져오는 요인으로서 파벌을 제시

중국의 공세적 부상이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고도화와 같이 최근 동북아에서 전개되는 불안정한 지역정세는 보수정당인 자민당으로서는 날개를 달아주는 재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수적 가치 및 정책을 지지하는 사회적 기반이 있으며 그것에 바탕을 두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인재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베 수상이 추진한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도입이나 앞으로 추진할 헌법개정 등이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추가적, 상황적 재료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0년대의 현황은 1990년대 이후의 정치대국화나 보통국가화가 걸프전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어서 완만히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겠다.

(2) 기존 논의

일본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됐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처음에는 비서구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서구제국주의를 극복하고 서구화 및 근대화를 달성하여 전전에 이미 선진국의 일원에 포함된 나라라는 측면에서 일본특수론이 제기됐지만, 이후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특히 그에 대한 많은 반론들이 제기되었다. 그 대표적인 질문들이 일본을 과연 합의중심적인 사회 및 국가만으로 볼 것인지, 국가중심적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관료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로만 볼 수 있는 것인지, 국가를 뒤에서 조종하는 대기업중심의 국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등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일본, 특히 전후일본에 있어서의 정책결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물음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캘더 교수는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로 통합해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8]

하는 것은 파벌의 다양한 기능 중 하나인 '엘리트충원기능'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파벌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면우, "제1장 일본의 정치개혁, 정당개혁,' 이면우 편, 『일본의 국가 재정립』,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pp. 19-48을 참조바람.

[8] K. Calder, 상게서, pp. 4-7.

즉, 전후일본의 정책프로필을 보면 보수정당의 정책이라고만 하기에는 매우 폭넓은 측면이 있다면서, 일본의 자민당 정권이 추구한 폭넓은 정책프로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일본에 대한 기존의 설명들이 부분적인 것에 그친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맑시즘적 시각에서 보면 대기업의 이익을 반영해야 할 보수정당의 정책이 중소기업이나 농민의 이익을 반영해 대기업의 요구를 외면하는 정책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을 특수한 합의중심적 사회 및 국가로 보는 견해가 한동안 강했지만, 일본의 정책결정과정을 보면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자들이 다양한 레벨에서 갈등을 빚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는 지적이기도 한다. 따라서 찰머스 존슨의 국가중심적 또는 관료중심적 설명이 전후일본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70년대 이후의 정책패턴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고, 펨펠의 '노동제외의 조합주의(코포라티즘)'이나 크라우스의 '제한된 다원주의' 등도 부분적 설명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족분에 대한 캘더의 대안적 설명이 '위기와 보상'이라는 가설이다. '위기와 보상' 가설은 정책변화가 위기를 계기로 해서 진행된다는 주장에서 출범한다. 즉, 일본의 정치가들은 안정적인 정치적 틀을 선호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정치를 운용하는데 위기는 그러한 기존의 안정적 정치 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변화를 요구하게 되기에, 정치가들이 이러한 불만과 변화요구에 대응하면서 기존 정책에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 정책에의 변화란 대체로 종전의 성장전략에서 재분배정책으로 선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평상시의 정책결정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맞이함에 따라 그 대응으로서 보상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안정적 정치 틀을 추구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194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까지 일본의 예산을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농업부문이나 분배정책부문 등의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통상 일본을 효율성을 중시하는 국가중심적 또는 관료중심적인 국가 및 사회로 인식하는 일반적 경향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으로, 이러한 차이의 배경에는 효율성에 대응해 비효율적인 부문을 고려하게 만드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효용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문에서 불만이 축적되는데 그러한 불만이 위기를 맞아 분출할 때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보상으로 대응함으로 해서 종전의 안정적인 정치 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와 보상의 메카니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함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효율성이 높은 부문이 정치적 부문이 추구하는 정치적 안정이라는 목표에 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예를 들어 자민당과 대기업이 정치적 안정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자민당의 설립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자민당이 창당되기 이전의 보수진영은 자유당과 민주당 등의 다양한 정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러한 정당들이 자민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의 요인이 작용했다. 하나는 좌우로 나뉘어져 있던 일본의 혁신세력, 즉 사회당이 하나로 재통합하는 움직임이었다.[9]

다른 하나는 이러한 사회당의 통합움직임에 위기의식을 느낀 대기업 등의 경제계가 보수세력으로 하여금 통합을 요청한 것이다. 경제계의 이러한 통합요구는 사회당의 통합과 그에 따른 집권가능성의 증가는 자본주의적 체제를 위협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성장에 있어서

9) 자민당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많은 저작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음을 참고바람: 升味準之輔, 『戰後政治(下): 1945-55』,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3)과 北岡伸一, 『自民黨: 政權黨の38年』, (東京: 讀賣新聞社, 1995).

는 정치적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민당이 형성된 1950년대 중반은 일본경제가 전후 복구에 성공하고 본격적인 성장에 돌입해 가는 시점이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도 경제계는 정치적 안정을 요구하고 그를 위한 자민당 통합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전후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배경과 관련해서는 많은 요인들이 제시되지만 정치적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자민당에 의한 장기집권이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 계획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다.[10)]

둘째는 효율성 높은 부문이 정치적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라는 목표에 대한 동의 및 합의 외에도 그러한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능력 및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경제계가 정치적 안정이라는 목표에는 정치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자원배분이 대기업 등이 아닌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반발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계에 있어야 한다는 지적인 것인데, 이러한 자제력의 근원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제시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950년대 초반에 전전의 수준으로 복구된 것을 선언한 일본은 이후 70년대 초까지 두 자리 숫자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고도경제성장이 대기업 또는 재벌 하의 경제계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익이 다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정치안정이라는 더 큰 목표를 감수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자민당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에 있어서 경제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고, 일본의 경제성장이 위축되기 시작하는 80년대 이후에는 비효율적인 부문에 대한 재분분에 대해서 경제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반증된다고 할 수 있다.

10) 이와 관련해서는 주4에서 언급한 저서들을 참고바람.

셋째는 비효율적인 부문의 불만이 정치적 부문으로 하여금 심각하게 받아들여, 또는 그러한 불만을 해소함으로서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도록 하는 상황 및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부문에서, 즉 정치가들이 구태여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캘더 교수는 전후의 일본이, 특히 55년체제에 들어선 일본은 자민당에 의한 일당우위체제에 의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자민당 의원들 개개인을 본다면 의원직 유지와 관련해서는 여유롭다고 느끼기 어려운,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많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구조적 상황에 있었다고 제기한다.

예를 들어, 중선거구제에 의해 동일 선거구에서 다수의 입후보자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자민당에서는 타당과의 경쟁 이상으로 소속정당의 의원들과의 경쟁을 신경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소속정당이 같기에 정책으로 자신의 선명성 및 정체성을 밝히기 어려워 돈에 의한 보상의 선거가 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러한 측면이 강화되다 보니 파벌이 생겨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이익유도형 정치가 55년체제에서 생겨나게 만든 구조적 측면이다.

(3) 분석의 틀

상기한 바와 같이 위기는 국가나 정당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계기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캘더 교수의 경우 전후 일본의 정책이 이념이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일관성을 갖지 않는 이유, 즉 정책변화가 일어나는 배경과 관련하여 위기가 정책변화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며, 특히 위기에 대한 보상이라는 대응방식이 효율성추구의 정책과 재분배적 정책이 혼합되게 만들었다는 '위기와 보상'이라는 가설을 제시했다. 일본에서의 정책변화가 '위기와 보상'이라는 메카니즘에 의해 진행된다는 캘더 교수의 주장은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일

본 자민당의 유연성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다시말하면, 앞에서 일본의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자민당이 지니는 힘이 일본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국가주의적 전통 및 문화와 위기에 직면해 이념의 틀에 얽메이지 않는 유연성이라고 지적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자민당이 발휘하는 유연성의 메카니즘을 위기와 관련해 좀더 구체적인 분석의 틀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 1〉 위기의 유형과 대응방식

위기의 유형		대응방식
1. 국가적, 체제적 위기		1. 정책적 대응
a. 외교안보적 위기		a. 기존 정책 고수 및 강화
b. 경제사회적 위기	→	b. 보상적 대응/포퓰리즘적 대응
2. 정당적, 집권적 위기		c. 정책 변경
a. 정책적 위기(정책반대)		2. 리더십 교체
b. 정치적 위기(정치스캔들)		3. 제도적 개선

위기에 대한 자민당의 대응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민당이 처할 위기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대체로 〈표 1〉에서 보듯이 국가적 또는 체제적 위기와 정당적 또는 집권적 위기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적 위기란 위기가 단순히 자민당이라는 정당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사회 전체에 위협으로 인식되는 위기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70년대에 불어닥친 두 차례에 걸친 석유위기나 90년대 초에 발생한 냉전의 붕괴, 또는 3.11 대지진 등이 그러한 국가적 위기의 예라고 할 수 있겠고, 이처럼 국가적 차원의 위기는 크게 외교안보적 위기와 경제사회적 위기의 두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정당적 또는 집권적 차원의 위기란 그 영향이 자민당에게만 또는 자민당의 집권에만 영향을 미치는 위기라고 하겠다. 에를 들어, 정치적 스캔들에 의한 정치적 위기나 세율의 인

상이나 소비세와 같은 새로운 세제의 도입과 같은 정책이 가져오는 위기라고 하겠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해 자민당이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정책적 대응으로, 이는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의 정책적 대응은 기존 정책의 고수 및 강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예로서 90년대의 평성불황에 대해서 구조개혁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대응을 유지한 것을 제기할 수 있다. 평성불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와 관련된 많은 제안 중에서도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정책적 대응은 기존의 정책에 더하여 보상적 또는 포퓰리즘적 대응책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많은 언급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피해로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혁실계열의 자치단체장들이 등장하자 환경청을 설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세 번째의 정책적 대응은 기존의 정책을 폐기하고 다른 정책노선을 추구하는 정책변화이다. 석유위기에 직면하여 균형재정방침에서 탈피하여 적자재정노선으로 변경한 것이나 걸프전의 충격에 의해 PKO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이러한 정책변화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민당이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대응방식은 리더십의 교체이다. 문제가 되는 장관의 부분적 교체나 전반적인 내각개편 등과 같은 조치에 이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는데, 이 외에도 총재, 즉 총리 자신이 정치스캔들로 문제시될 때에는 새로운 총재선출에 의한 이미지 쇄신시도가 추구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다나카 총리나 다케시다 총리가 정치자금문제로 물러났을 때 이에 따른 자민당의 이미지 실추를 극복하고자 미키 총리나 가이후 총리를 내세운 것이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셋째로 자민당이 취할 수 있는 대응방식은 제도적 개편이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55년체제 하에서 계속되는 부정부패사건 등을 개선하고자 추구했던 선거제도개편이나 석유위기와 같은 상황에 따른 저성장기조에 대응하고자 추진된 행정개혁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위에서 언급한 위기의 유형과 자민당의 대응방식이 일관된 패턴을 보인다고 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국가적 위기의 경우 자민당의 대응방식은 대체로 첫 번째의 정책적 대응이나 세 번째의 제도적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는 반면에, 정당적 위기의 경우에는 두 번째의 리더십 교체나 세 번째의 제도적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는 무엇보다 정당적 위기를 가져오는 경우 그 요인이 대체로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구성하는 각료들의 부정부패와 같은 비리에서 발생되기 때문인데, 이에 반해서 국가적 위기는 대체적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여 국가의 내부적 결속이나 근본적인 대책으로서의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어떤 경우에 자민당의 위기대응이 성공하고 실패하는가를 검토한다. 따라서 국가적 위기의 경우 그 합당한 대응이 정책적 대응이기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자민당이 실패할 것이라는 예상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적 위기든 정당적 위기든 자민당은 자체적으로 활용가능한 상기의 세 가지 대응방식을 개별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어떤 경우에 자민당의 대응이 성공하고 실패하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기와 대응을 유형화해서 고찰한다는 점에서 캘더 교수의 '위기와 보상' 가설을 좀더 구체화해 검토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자민당의 대응이 어떤 경우에 성공하고 실패하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자민당의 유연성이 발휘되거나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 또는 메카니즘을 들여다 본다는 의미도 가진다고 하겠다.

2. 책의 구성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자민당이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에 대해 어떤 대응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라 취해진 대응조치가 어떤 경우에 성공하고 실패하는지를 검토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검토하게 될 사례의 선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표 2〉는 전후 일본이 경험한 대외적 상황 및 위기적 국면을 간략히 정리한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네 개의 사례연구로 구성해 제시한다.[11]

〈표 2〉 전후 일본의 대내외적 위기

위기와 대응 연대	국제정세	일본 국내정세	
		경제상황	정치상황
1945-1955	냉전형성기	전후복구기	다당제
1955-1970	냉전기	고도성장기/균형재정	55년체제/일당우위체제/
1970년대	석유위기	저성장기/확대재정	정치부패/혁신지자체/
1980년대	신냉전기	경제개혁/신자유주의	행정개혁
1990년대	냉전붕괴/세계화	평성불황기/신자유주의	정치부패/선거제도개혁/정권교체/96년체제/정치대국화
2000년대	세계화	불황기/고이즈미 구조개혁	신자유주의/정권교체
2010년대	중국부상	아베노믹스	정권교체/헌법개정/집단적자위권

제1장의 사례는 1960년 11월에 행해진 제 29회 중의원 총선거이다. 동 선거와 관련해 자민당이 처한 상황은 기시 수상이 추진한 미일안보조약 개정에서 시작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른 미일안보조

11) 본 연구에서 사례로서 선택한 네 개의 위기에는 70년대의 경제위기적 측면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많은 연구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위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했기 때문이다.

약이 일본으로서는 불평등하다는 관점에서 개정을 추진한 기시 수상이었지만, 이에 대한 야당 및 시민세력의 반발은 매우 큰 것이었다. 기시 수상은 미일안보조약의 개정이 국회에서 비준되는 것을 보았지만 사회로부터의 엄청난 반발로 인하여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방일을 취소해야 했고 급기야 내각총사퇴라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뒤를 이어서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고 총리에 임명된 이케다 총리에 의해 치러진 것이 제29회 중의원 총선거였다. 이케다 총리는 안보개정소동으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소득배가정책'이라는 슬러건으로 이겨내고자 했다. 즉, 안보개정소동이라는 사회적 국가위기를 자민당의 리더십 교체라는 대응으로 이겨낸 사례라고 하겠는데, 제29회 중의원 총선거에서의 자민당 승리가 이케다 통리의 이러한 정책변화 덕인지 어떤지를 이케다 총재의 탄생과 '소득배가정책'의 도입과정을 검토함으로서 살펴본다.

제2장의 사례는 1976년 12월의 제34회 중의원 총선거이다. 동 선거와 관련해 자민당이 처한 상황은 다나카 수상의 정치스캔들로부터 시작된다. 일본개조론으로 유명한 다나카 수상은 결국 록히드사건 등의 정치스캔들에 의해 사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뒤를 이은 미키 수상에 의해 치러진 것이 제34회 중의원 총선거였다. 미키 수상은 소규모 파벌의 리더였음에도 미스터 클린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덕에 다나카 수상의 정치스캔들로 인해 실추된 자민당의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해서 수상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정치스캔들에 의한 정당적 위기를 리더십 교체라는 자민당의 대응조치가 제34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인지를 검토한다.

제3장의 사례는 1993년 7월의 제40회 중의원 총선거이다. 동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위기상황은 '동경 사가와규빈'사건으로 시작된다.

가네마루라는 정권실세의 실각을 가져온 동 사건은 후계구도를 둘러싼 자민당 내부분열이 정치부패문제에 대한 선거제도개혁의 실시라는 문제와 연동되면서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내부사정으로 인해 결국 오자와 의원 등이 자민당을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를 수습하지 못한 채 치러진 1993년의 중의원 총선거는 자민당의 대패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동 장에서는 '동경 사가와규빈'사건이라는 정치스캔들이 어떻게 자민당의 패배와 야당으로의 전락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자민당의 대응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동 장에서는 특히 '동경 사가와규빈'사건이 자민당의 선거패배와 연관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이전에 발생한 '리쿠르트'사건과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한 검토도 간략히 진행할 것이다. '리쿠르트'사건은 자민당 내의 최대파벌인 다나카 파벌을 이어받아 장기집권이 예상되었던 다케시다 수상을 그치게 했는데, 그 뒤를 역시 단명에 그친 우노 수상에 이어서 취임한 것이 제2의 미키라고 할 수 있는 가이후 수상이었다. 가이후 수상 하에서 진행된 제39회 중의원 총선거는 자민당으로서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는데, 어떻게 제40회의 중의원 총선거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인지를 함께 검토할 것이다.

제4장의 사례는 1996년 10월의 제41회 중의원 총선거이다. 동 선거와 관련된 자민당의 정치적 상황은 야당으로 전락한 자민당이 사회당과의 연립정권 형성이라는 전략으로 정권복귀에 성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신당사키가케의 다케무라 의원을 중개자로 형성된 자사사 연립정권 전략은 하시모토 내각의 실현을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제41회 중의원 총선거에서도 자민당으로 하여금 여전히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39석을 차지하는데 그쳐서 전과 같은 지지를 받았다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부족했다. 자민당의 이러한 선거결

과, 특히 이러한 수치는 한동안 지속되는데, 이러한 경향을 정당적 위기라 한다면 자사사 연립정권 전략으로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떠한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검토한다.

모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는 일본 보수주의의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는 의문과 관련해 자민당의 유연성과 일본사회 또는 일본유권자의 국가주의적 전통 및 문화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주목해서 검토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자민당의 유연성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위기대응력을 검토하는 것이다. 자민당이 위기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그러한 대응이 선거결과로 볼 때 성공적이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또한 자민당 내에서 위기대응에 대한 합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일본문화는 대체로 합의를 중시한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안보투쟁에서 '소득배증' 정책으로의 전환이나 다나카 수상의 퇴임 후 미키 수상의 성립이 매우 원활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자민당 내의 파벌역학은 매우 경쟁적이고 때로 매우 대립적인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데, 자민당의 위기대응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검토하는 것은 자민당 정치의 진면목은 물론, 일본정치문화의 한 단면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유연성에 대한 초점은 일본의 국가주의적 전통 및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발휘되는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나마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가 다루는 사례가 1960년대부터 1990년대를 커버하기에 국제정세의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제1장

안보조약 개정 소동에서 '소득배가' 정책으로

본 장에서는 자민당의 위기대응에 대한 첫 번째 사례로서 1960년의 안보조약 개정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 소위 말하는 1960년의 '안보투쟁'에 대해서 검토한다. 1960년의 안보투쟁 과정은 기시 수상이 미일안보조약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하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1960년 1월의 기시(岸信介) 수상을 중심으로 한 전권단의 방미와 신조약 조인(19일), 5월 20일의 중의원 본회의 통과, 6월 19일의 자연 성립, 6월 23일의 기시 내각 총사직, 7월 19일의 이케다 내각 출범, 그리고 11월 20일의 중의원 총선거에서의 자민당 승리로 구성된다고 하겠다.

기시 수상은 샌프란시스코조약에 따른 미일안보조약이 일본으로서는 불평등하다는 관점에서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에 대한 야당 및 시민세력의 반발은 매우 큰 것이었다. 기시 수상은 미일안보조약의 개정이 국회에서 비준되는 것을 보았지만 사회로부터의 엄청난 반발로 인하여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방일을 취소해야 했고 급기야 내각총사퇴라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뒤를 이어서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고 총리에 임명된 이케다 총리 하에서 치러진 것이 제29회 중의원 총선거였다. 이케다 총리는 안보개정소동으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소득배가정책'이라는 슬로건으로 이겨내고자 했다. 즉, 안보개정소동이라는 사회적 국가위기를 자민당의 리더십 교체라는 대응으로 이겨낸 사례라고 하겠는데, 제29회 중의원 총선거에서의 자민당 승리가 이케다 통리의 이러한 정책변화 덕인지 어떤지를 이케다 총재의 탄생과 '소득배가정책'의 도입과정을 검토함으로서 살펴본다.

1. 위기상황: 안보개정 소동

일본에서 안보투쟁은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반대하는 일본의 국회의원, 노동자, 학생, 시민 등이 참여한 대규모의 데모운동을 지칭한다고 하겠는데, 이는 1960년과 1970년의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다.[12] 70년의 안보투쟁은 투쟁에 참가한 좌익세력이 분열되고 폭력적인 것으로 격화됨에 따라 일반대중이나 지식인의 지지 및 호응을 얻지 못한 체 진행됐지만, 60년의 안보투쟁은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여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시 수상의 퇴진을 가져온 것이었고 그 정도로 집권당인 자민당에 위기를 가져온 바, 본 절에서 언급하는 안보투쟁도 60년의 안보투쟁을 의미한다.

미일간의 안보조약은, 1951년 9월 8일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및 영국을 시작으로 한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 47개국과 일본의 사이에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조인됐을 때, 일본대표로 참석했던 요시다 시게루 수상이 이와 동시에 평화조약에 포함된 특약(제6조 a항. 2국간협정에 의한 특정국군의 경우 주둔용인)에 근거해서 서명한 "일본국과 미국과의 사이의 안전보장조약"(구미일안전보장조약)을 지칭하는 것이다.[13] 이 조약에 의해 일본을 점령했던 연합국군중 하나인 미국은 '재일미군'이 되어 지속해서 일본에 주둔하게 되었는데, 기시 수상은 동 조약이 일본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개정을 추진했던 것이다.

기시 수상은 1958년경부터 개정의 교섭을 추진하여, 1960년 1월

12) 본 절에서 다루는 안보투쟁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에는 다음을 참고함: 일본 위키디피아(https://ja.wikipedia.org/wiki)의 안보투쟁과 기시 수상에 대한 부분; 北岡伸一, 『自民黨: 執權黨の38年』, (東京: 讀賣新聞社, 1995), pp. 75-96; 渡邊昭夫編, 『戰後日本の宰相たち』, (東京: 中央公論社, 1995), pp. 121-147; 宇治敏彦, 『首相列傳: 伊藤博文から小泉純一郎まで』, (東京: 東京書籍, 2002), pp. 258-269.

13) 앞서 언급한 일본 위키디피아(https://ja.wikipedia.org/wiki)의 안보투쟁 부분.

에는 자신을 필두로 하는 전권단과 함께 방미해서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과 회담하고 신안보조약에 조인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방일에도 합의했는데, 신안보조약의 개정 내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였다.[14] 첫째는 내란에 관한 조약부문을 삭제하고, 둘째는 미일공동방위를 명문화한 것이며, 셋째는 재일미군의 배치 및 장비에 대해서 양국 정부간의 사전협의제도를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둘째와 관련해서는 일본을 미군이 지키는 대신에 재일미군에의 공격에 대해서는 자위대와 재일미군이 공동으로 방위행동을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종전의 안보조약이 단순히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미일공동방위를 의무화한 보다 평등한 조약으로 개정하는 것이 기시 수상의 주장이었다.[15]

기시 수상이 귀국할 즈음, 국회심의는 신조약의 승인을 둘러싸고 안보폐기를 주장하는 일본사회당의 저항에 의해 분규했다. 조인 전부터 일본 내에서는 개정에 의해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있었고, 주일미군재판권방기밀약에 의해 주일미군에 대한 면책특권과 관련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반대운동이 비등해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공산당을 탈당한 급진파 학생들이 결성한 '공산주의자동맹'(분트)이 주도한 전일본학생자치회총연합(全学連)은 "안보를 타도할 것인가, 분트가 타도될 것인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총력을 다해서 반대투쟁에 임했다.[16]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고 따라서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던 것이나 도조내각의 각료였던 기시 수상 본인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것도 영향을 미쳐서 "안보는 일본을 미국의 전쟁에 휘말리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다수의 시

14) 위의 글.
15) 北岡伸一, 『自民黨: 執權黨の38年』, 1995, 특히 pp. 75-85.
16) 상기한 일본 위키디피아(https://ja.wikipedia.org/wiki)의 안보투쟁 부분에서 인용함.

민에게 있었고 그에 따라 반대가 심했다. 이에 편승해서 기성의 혁신 세력이었던 일본사회당이나 일본공산당은 조직 및 지지단체를 동원해 운동의 고양을 추구했다. 예를 들어, 일본사회당의 주요 지지단체였던 소효(總評)는 국철노동자를 중심으로 '안보반대'를 모토로 한 시한스토를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했다. 하지만 전학련이 주장하는 국회난입전술에는 '극좌모험주의의 전학련(트로츠키집단)'이라며 반대하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전학련은 기성정당의 온건한 데모활동을 '분향데모'(오쇼우코-)라고 비난했다.[17]

이런 가운데 5월 19일에 중의원 미일안전보장조약 등 특별위원회에서 신조약안이 강행 체결되었고, 5월20일에는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원회 채결에 있어서 자민당은 연좌전술을 펴는 사회당의원을 배제하기 위해 우익 등으로부터 강건한 청년들을 공설비서로 동원하여 경관대와 함께 사회당 의원들을 들어내 체결한 것이었다. 이는 6월 19일로 예정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방일까지 자연 성립시키기 위해 체결을 서두른 것이었다. 본회의에서는 사회당과 민사당 의원들은 결석했고, 자민당으로부터도 강행채결에 대해 항의한 이시바시 단잔(石橋堪山), 고노 이치로(河野一郎), 마쓰무라 겐조(松村謙三),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등이 결석 또는 기권했다.

국회에서의 이러한 진행에 따라 투쟁은 격화되었다. 일반시민의 사이에서도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반대운동의 기운이 높아져 데모대가 국회의사당의 주위를 둘러싸는 일이 연일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투쟁도 격화일변도를 걸었고 반안보투쟁은 점차 반정부. 반미투쟁의 색채를 진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시 수상은 경찰과 우익의 지원만으로는 데모대를 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민당 내의 아이크환영실행위원회 위원장인 하시모토(橋本登美三郎)를 특사로 내세워 폭력단

17) 위의 글.

체 관계자와 회의를 추진했다.[18]

또한 우익과 폭력단으로 구성된 '전일본애국자단체회의'나 전시 중에 초국가주의를 추구했던 '일본향우회', 기시 수상 자신이 1958년에 조직해 기무라(목촌)가 이끄는 '신일본협의회'의 우익연합조직에 대해서도 행동부대가 될 것을 요청했다. 당시의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는 "박도, 폭력단, 암흑가 등의 리더들을 설득해 아이젠하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효과적인 반대세력'을 조직했다. 최종계획에 따르면 1만8천인의 박도, 1만인의 테키야, 1만인의 구군인과 우익종교단체 회원의 동원이 필요했다. 여기에 기시 수상은 창가학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에 대해서, 오사카사건의 재판에서 무죄를 교환조건으로 제시하며 협력을 의뢰했지만, 이것은 거절당했다고 전해진다. 그들은 정부제공의 헬리콥터, 소형기, 트럭, 차량, 식료, 사령부나 구급대의 지원을 받아, 더욱이 약 8억엔의 '활동자금'이 지급되었다"고 쓰고 있다.

"국회주변은 소란스럽지만, 긴자나 코라쿠엔 구장은 언제나 지나갈 수 있다. 나에게는 '소리없는 소리'가 들린다"는 기시 수상의 언급에서 보듯이 당시 그의 인식 및 입장은 강경했다. 그럼에도 수상직을 역임한 이시바시, 히가시쿠니, 가타야마의 3인까지 퇴진권고를 하는 것에 이르러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고, 하가티 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하가티 사건이란 하이젠하워 대통령의 방일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6월 10일에 방일한 제임스 하가티 대통령보도관이 동경국제공항(당시 하네다공항) 주변에서 데모대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미해병대의 헬리콥터로 구출되는 사건이었다.

이에 더해 6월15일에는 폭력단과 우익단체가 데모대를 습격해서 많은 부상자를 냈고, 국회 주변에서는 기동대가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18) 위의 글.

서 대규모로 국회내로 진입하려는 데모대와 충돌해서 데모에 참가했던 간바 미치코(?美智子)가 압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1시에 열린 국회 영내에서의 전학련 항의집회에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학생들이 폭도화해서 경찰차량에을 방화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회 앞에서의 데모참가 규모는 주최측 발표에 따르면 총 33만인, 결시청 발표로는 약 13만인이었고, 부상학생 약 400인, 체포자 약 200인, 경찰관 부상 약 300인이 발생했다.

기시 내각은 16일 오전 1시 30분에 긴급임시각의성명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데모대를 비판하는 것이었다. 즉, "이번의 전학련의 폭거는 폭력혁명에 의한 민주적인 의회정치를 파괴하고, 현재의 사회질서를 뒤엎으려는 국제공산주의의 기도에 놀아난 계획적 행동의 다름 아닌 것으로,… 국민 모두에 있어서도 이번의 불상사건의 배후에 숨어든 본질을 꿰뚫고 일층 이해와 협력해줄 것을 요망한다"는 것이었다.[19] 이러한 입장에 따라 기시 수상은 계속되는 격렬한 항의운동에 대해 15일과 18일에 아카기(赤城宗徳) 방위청장관에게 육상자위대의 치안출동을 요청했지만, 이사하라(石原幹市郎)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이 반대했고 아카기 장관도 결국 출동요청을 거부했다.[20]

신안보조약은 참의원의 의결이 없는 가운데 6월 19일에 자연 성립되었지만, 아이젠하워의 방일은 연기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인 중지였다. 기시 내각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책임을 취하는 형태로 신안보조약의 비준서가 교환된 6월 23일에 총사직을 표명했다.

---

19) 위의 글.

20) 渡邊昭夫 編,『戦後日本の宰相たち』, 1995, p. 142; 宇治敏彦,『首相列傳: 伊藤博文から小泉純一郎まで』, 2002, p. 265.

2. 자민당 대응: 이케다 내각의 성립과 자민당 내 파벌역학

기시 수상의 사퇴표명에 따라 7월 14일에 진행된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는 이케다 통상대신이 차기 총재로 선출되었다. 〈표 3〉에서 보듯이 이케다는 1차 투표에서 다수표를 획득할 수 있었지만 과반수를 넘지는 못했고, 이어진 결선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여 차기 총재에 선출될 수 있었다.

〈표 3〉 1960년 7월 14일 자민당 총재선거

예선	이케다 (池田勇人)	이시이 (石井光次郎)	후지야마 (藤山愛一郎)	마쓰무라 (松村謙三)	오오노 (大野伴睦)	사토 (佐藤榮作)
	236	196	49	5	1	1
결선	이케다	이시이				
	302	194				

출처: 일본 위키디피아(ja.m.wikipedia.org)의 '自由民主黨總裁選擧' 부분에서 '1960年自由民主黨總裁選擧'.

〈표 4〉에서 보듯이 파벌간의 세력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케다가 총재직 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에는 세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는 자금에 의해 표를 사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이는 1960년 7월의 총재선거에서 대량의 자금이 움직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21] 둘째는 인맥에 의한 투표행위이다. 자민당의 형성은 종전에 보수 및 리버럴 세력에 속하는 자유당 및 민주당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자민당 내에서 다시 예전부터 정치에 몸담았던 당인파와 관료의 경험을 가지는 관료파로 나뉜다. 결선투표에서 기시나 사토가 이케다를 지지하게 되는 것은 관료파로서의 측면이라고 하겠다.[22] 셋째

21) 渡邊昭夫 編, 『戰後日本の宰相たち』, 1995, p. 159.

22) 北岡伸一, 『自民黨: 執權黨の38年』, 1995, pp. 97-100; 渡邊昭夫 編, 1995, pp. 157-159.

는 정책적 또는 이념적 유사성 및 동조에 의한 투표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케다이 주장한 '소득배가정책'이라는 측면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시 내각에서 발생한 안보투쟁이 자민당에 위기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이다.

〈표 4〉 11월 20일의 제29회 중의원 총선거에서의 자민당 파벌별 당선자 수

파벌명	의석수
이케다파(宏池会, 池田勇人派)	48
기시파(箕山会, 岸信介派)	45
사토파(木曜研究会, 佐藤栄作派)	44
고노파(春秋会, 河野一郎派)	31
오오노파(睦政会, 大野伴睦派)	26
후지야마파(愛正会, 藤山愛一郎派)	25
미키파(政策懇談会, 三木武夫派)	25
이시이파(水曜会, 石井光次郎派)	17
이시바시파(火曜会, 石橋湛山派)	5
무파벌	29

출처: 일본 위키디피아(ja.m.wikipedia.org)의 '自由民主黨總裁選擧' 부분에서 '1960年自由民主黨總裁選擧'.

이상의 세 가지 설명 중에서 두 번째의 자민당의 의도적인 이케다 선출은 총재선거의 과정을 보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총재선거의 과정을 보면 자민당이 의식적으로 기시 내각이 가져온 자민당의 위기를 이케다의 선출 및 '소득배가정책'으로 이겨내고자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하다. 첫째는 기시 수상이 자신의 퇴임에 따른 차기총재의 선출과 관련해 공선보다는 대화에 의한 방식을 선호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러한 대화에 의한 선출에 대해서 이케다는 반대하고 공선에 의한 방식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기시 수상이 대화에 의한 선출을 위한 후보자의 단일화를 추구했던 배경에는 퇴임 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와 더불어 안보투쟁이라는 정국불안을 좀 더 온건한 인물로 앉힘으로 해서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특히 후자적인 생각은 자민당 내에서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가와시마(川島正次郎) 간사장은 선거일을 7월 13일로 정하면서도 최종일까지 후보 단일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케다가 대화에 의한 선출을 반대한 이유는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23] 대화에 의한 선출의 경우 오오노(大野伴睦)가 유력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공선에 의한 선출에 있어서 이케다가 유리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이케다의 판단 및 의욕도 그의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케다는 통상대신으로서 안보투쟁과 관련하여 강력한 대응, 예를 들어 자위대의 치안출동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한 이케다 보다는 오노와 같은 온건한 인물을 추천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아사히신문의 류(笠信太郎) 주간은 이케다파의 미야자와(宮澤喜一)를 불러서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 우선은 아사히신문 출신인 이시이(石井光次郎)와 같은 온건한 인물에게 양보하고 다음에 이케다가 나서는 사퇴안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안을 타당하게 생각한 미야자와는 오히라(大平正芳)와 함께 이케다에게 제언했는데 이케다는 집권가능성을 언급하며 거부했던 것이다.[24]

장소문제로 7월14일에 진행된 총재선거의 결과는 위에서 본 바와

---

23) 1960년 7월의 자민당 총재선거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ja.m.wikipedia.org의 1960年 自由民主黨總裁選擧; 北岡伸一, 『自民黨: 執權黨の38年』, 1995, pp. 97-100; 渡邊昭夫 編, 『戰後日本の宰相たち』, 1995, pp. 150-174.

24) 渡邊昭夫 編, 『戰後日本の宰相たち』, p. 158.

같이 이케다의 당선이었는데 이에는 위에서 언급한 자민당 내의 당인파 대 관료파 사이의 갈등 및 알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재선거를 앞두고 당인파에는 오노파, 고노(河野一郎)파, 그리고 미키(三木武夫)파가, 그리고 관료파에는 이케다파 외에 사토파와 기시파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시 수상 및 기시파가 최종적으로 이케다에게 표를 던진 배경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당인파의 결속을 주장한 고노를 견제하려는 측면이다. 당인파란 대체로 전전기부터 의정활동을 한 인물들이고 관료파란 전전기에 관료로서 재직해 전후에 정치활동을 한 인물들로서 이들 사이에는 정책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어 갈등을 빚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당인파인 고노는 후보자 단일화 및 2, 3위 연합 등의 방법으로 당인파 의원들의 결속을 추구했던 것인데, 이에 대한 견제의 측면도 있지만 기시 수상으로서는 안보개정안의 국회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당인파의 고노나 미키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는 요시다 전 수상의 역할이다. 요시다파는 이케다파와 사토파로 나뉘었는데, 요시다의 역할은 사토파 내에 있던 반이케다적 분위기나 중립을 표방한 기시 수상을 이케다표로 전환한 것에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민당 내의 불리한 파벌역학에도 불구하고 이케다가 결국 총재직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에는 그의 정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의욕과 준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의 성장배경 및 경력, 그리고 자금 및 인맥에 대해서 간략히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케다는 히로시마현 출신으로 교토제국대학 졸업후 대장성에 들어갔으나 교토대 출신인 점 등이 작용하여 출세가도를 달리지는 못하고 지방세무서를 전전, 설상가상으로 불치의 병에 걸려서 1931년에는 대장성을 퇴직해야 했다.[25] 1934년에는 병이 완치되어 대장성에

다시 복직하게 되지만 34세의 나이에 신규 채용되는 형태였고, 따라서 한동안 지방세무서를 전전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세전문가로 알려지게 되어 1941년에는 본성의 주세국 경리과장, 1945년에는 주세국장을 역임했다. 전후에 들어서는 미군정과 함께 세제개혁에 임하고 제1차 요시다 내각에서 대장성 차관에 발탁되어 대장대신이었던 이시바시와 함께 재정재건의 실무를 담당했다.

1947년에 대장성을 퇴임한 이케다는 1949년의 제24회 중의원 총선거에 출마해 톱 당선을 이루었는데, 선거후의 조각에서 요시다 수상은 자신이 잘 모르는 경제분야의 전문가로서 당선 1회의 이케다를 대장대신으로 낙점했다. 이케다는 당시 재계에 그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억력이나 숫자에 밝은 점이 요시다로 하여금 신뢰할만한 경제전문가로서 발탁하게 만들었다는 일화가 있다. 소위 말하는 요시다파 또는 요시다스쿨의 주요 인물인 이케다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대장대신으로서의 이케다는 후년의 '소득배증' 정책에서 보듯이 재정확대론자였지만 미국의 조셉 닷지가 제시한 긴축노선을 충실히 실행해 국내적으로는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미국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케다는 수상이 되기 전부터 경제전문가로 알려져 있었고, '소득배증' 정책을 제시하기 이전부터 그와 연관된 재정확대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케다가 수상직에 오르기 위해 '소득배증' 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26]

첫째는 '소득배증' 정책이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는 점이다.… 이케다의 '소득배가정책'이 세상에 나오

25) 이케다에 대해서는 상기한 北岡伸一, 渡邊昭夫, 宇治敏彦의 책들 외에도 일본 위키디피아(ja.m.wikipedia.org)의 '池田勇人' 부분을 참고함.

26) 이케다가 '소득배증정책'을 제시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자료들 외에 일본 위키디피아(ja.m.wikipedia.org)의 '所得倍增計劃' 부분도 참고함.

기까지는 복잡한 경위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론적 골격은 그의 파벌인 고지카이(宏池會)가 결성된 1957년부터 이케다의 지시를 받은 시모무라 등의 이케다 브레인이 케인즈적 사상을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일본경제와 국민생활이 앞으로의 10년간에 어디까지 풍요로워 지겠는가 하는 잠재성장력의 추계를 대장성 내에서 계속 연구했고 이케다와의 논의를 거쳐 단련시켰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케다가 확실히 '배증'이라는 발상을 명확히 한 것은 요미우리신문의 1959년 1월 3일자 조간에 게재된 히도쓰바시대학의 교수였던 나카야마(中山伊知郎)의 짧은 에세이를 읽은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27]

나카야마의 에세이에는 신문사에 의해'임금2배를 제창'이라는 제목이 주어졌는데, 이케다는 내용 이상으로 제목의 '임금2배'의 낱말에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다.[28] 월급이 두배로 된다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이론과는 별도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가진 구상으로 굳히게 됐다는 것이다. 시모무라는 "일본경제의 성장가능성이 당시 국민전체가 느끼는 상태 보다 크게 강하다고, 이케다 씨가 점점 느끼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술회하고 있다.[29]

이케다가 처음으로 '월급배증론'을 언급한 것은 고향인 히로시마에서 연설회를 개최한 1959년 2월 22일이었다. 연설 이후 미야지마(宮澤喜一), 오히라(大平正芳), 도사카(登坂重次郎)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이케다는 "월급배증으로는 안돼. 월급과 같은 급료를 취하는 것만이 상대라고 생각하게 된다. '소득배증'으로 하자"라고 말했다고 전

27) 渡邊昭夫 編,『戰後日本の宰相たち』, pp. 157.

28) 정책형성 및 정책변화와 관련해서 제시되는 '가비지캔(휴지통) 모델'의 과정이 잘 반영된 사례라고 하겠다. 즉, 평소 경제성장에 관심을 가진 이케다라는 리더가 그 방안을 모색중이던 가운데 나카야마의 해결안을 채택해서 기존의 경제정책을 재정확대적으로 변경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면(상황)을 안보에서 경제로 전환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29) 渡邊昭夫 編,『戰後日本の宰相たち』, p. 157.

해지지만, 히로시마에서 귀경하는 길에 들른 오사카에서 개최된 간사이 재계인과의 자리에서도 다시금 '월급배증론'을 주창한 것으로 보아서는 1959년의 시점에서는 '월급배증론'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괜히 노동자측에게 달콤한 기대를 품게하는 것이 된다"거나 "월급을 두배로 하면, 분명 인플레가 된다. 무리하게 생산력을 높이면 수입이 격증해서 국제수지가 대폭 적자가 된다"는 등의 반대론에 부딛혔다.[30] 이케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귀향후인 3월 9일의 '일본경제신문' 조간에 '경제시평'의 난을 활용하여 '나의 월급배증론'이라는 제하의 소논문을 발표했다. 내용의 주요 논지는 "지금 월급을 곧바로 두 배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노력과 정책의 운용을 취하면 생산이 향상된다. 열심히 힘을 충실하게 하고, 국민경제가 성장하게 하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억누르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 인플레의 우려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31] 이 논의는 커다란 반응을 불러일으켜 '국민총생산'이라는 경제용어가 처음으로 정치가에 의해 매스미디어에 전달되게 되었다고 한다.

둘째는 '소득배증'정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보인다는 점이다. 상기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이케다의 '소득배증'정책이 그의 핵심정책 또는 슬로건으로 만들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의 계기가 있었다. 첫 번째는 기시 내각 하에서 '소득배증'정책의 담당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케다는 1959년 6월의 참의원 통상선거에 있어서도 당내 야당으로서 '월급배증론'을 활발히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기시는 이케다를 강력한 반주류파에 잔류시켜서는 불리하다고 판단해 내각개조에 즈음해서는 '소득배증계획'의

30) 北岡伸一, 『自民黨: 執權黨の38年』, p. 99.
31) 渡邊昭夫 編, p. 157.

실현을 일임하겠다는 약속으로 이케다를 통산대신으로 입각시켰던 것이다.[32]

두 번째는 기시의 이케다 견제정책이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시는 이케다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핵심부하인 후쿠다(福田越夫)로 하여금 견제시키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후쿠다를 대장상에 앉히는 구상을 가졌던 것이다.[33] 하지만 자신의 동생인 사토(佐藤榮作)가 대장상의 유임을 고집하였기에 후쿠다의 대장상 취임은 취소됐는데, 이에 따라 이케다는 통산대신으로서 '소득배증계획'과 동일한 적극재정론을 공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이듬해의 안보투쟁에 의해 기시 내각에서는 제대로 전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케다로서는 '소득배증정책'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하겠다. 이처럼 이케다는 입각에 의해 차기정권의 기회를 촉진할 수 있었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재정론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주력하면서 브레인들과 '소득배증계획'의 원형을 만들어갔던 것이다.

세 번째는 1959년 10월, 자민당내에 설치된 경제조사회가 제출한 보고에서 이케다나 사토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클레임을 걸어 백지화했다는 점이다. 당의 기본구상을 번복한 이케다의 배경에는 '시모무라플랜'이 준비되고 이미 골격을 만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 데이터부족을 지적했던 것이다.[34] 기시 내각은 할 수 없이 11월 26일의 경제심의회에 새롭게 자문을 구했지만, 이 시점에서 이미 1960년도의 예산편성은 그 해 9월에 있었던 이세만 지역의 태풍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국토보전정책이 중점적인 지출배분을 받았고, '소득배증계획'에는 중점을 둘 수 없었다.

이케다가 자민당 총재직과 수상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에는 또한

32) 일본 위키디피아(ja.m.wikipedia.org)의 '所得倍增計劃' 부분.
33) 위의 글.
34) 위의 글.

'소득배증' 정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과 함께,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맥을 형성하는 노력 또한 경주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케다가 총재직에의 도전을 위해 인맥관리에 들어간 것은 특히 기시 수상에 의한 1957년 7월의 내각개조로 인해 대장대신직에서 물러난 때로 알려져 있다. 이시바시 수상이 병환으로 수상직을 수행하기 힘들게 되자 임시수상대리를 맡았던 외상의 기시가 후계자가 되었는데, 이케다도 후계후보로 나섰지만 당내의 저항이 있어서 좌절됐던 것이다. 그럼에도 1957년 2월에 출범한 제1차 기시내각에서는 대장대신직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기시로서도 정적인 이케다지만 금융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이케다에게 일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1957년7월의 내각개조에서는 일은(日銀)출신의 이치마다를 대장상으로 기용하면서 이케다에게는 다른 포스트를 제안했던 것인데, 이케다는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고 당내야당으로 전환하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후원조직의 정비와 함께 정권에의 길을 다졌던 것이다. 우선 1957년 10월경에는 이전에 자유당의 요시다파를 사토와 나누는 형태로 자신의 정책집단 및 파벌인 고지카이(宏池会)를 결성했다.[35] 고지카이는 경제를 기치로 내건 첫 정책집단이었지만 자민당 파벌의 원점으로 알려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 자민당집행부는 기시의 의향을 받아서 "당내의 파벌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창했지만 유지되었다. 자민당집행부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고지카이는 1957년 10월에 기관지 '진로'를 발간하며 공공연히 파벌의 기치를 내걸었는데 이에 따라 자민당 내의 파벌의 존재를 국민이 명확하게 의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계인의 백업도 이 때 강화되었다. 이케다는 대장성 출

35) 위의 글. 北岡伸一, 『自民黨: 執權黨の38年』, p. 99에도 언급됨.

신자의 모임은 물론, 사쿠라다(桜田武)나 나카노(永野重雄), 곤도(近藤荒樹), 오다와라(小田原大造), 하츠가테 요우노신(廿日出要之進)과 같은 히로시마출신자, 오쿠무라(奥村綱雄)나 오오타(太田垣士郎), 홋다(堀田庄三), 호리에(堀江薫雄) 등과 같은 고등학교(五高)나 대학(京大)의 학벌 모임나 지지자를 이미 갖고 있었다.[36] 이 외에도 요시다가 "이케다의 장래를 위해 모두 응원해주지 않겠는가"라고 재계인에게 주선하여 만든 수에히로카이(末広会)라는 재계4천왕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나 마쓰나가(松永安左ヱ門)가 이케다의 지지자를 모아서 만든 '화요회'(火曜会) 등이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케다와 재계의 관계는 돈독한 것이었다고 하겠는데, 이는 이케다가 경제담당상을 역임함에 따라 재계와 깊은 연줄을 가진 때문이기도 하지만, 재계는 특히 전후의 자본주의적 재건에 노력하는 이케다의 수완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하겠다. 이케다가 이처럼 자신만의 인맥을 구축하고자 했던 것에는 무엇보다 요시다나 닷지의 비호로부터 자립하면서 정치적 지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보수합동을 둘러싸고 사토와의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사토의 실형인 기시가 총리가 되고 그에 따라 요시다와도 거리를 두게 되었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결과: 1960년 11월의 제29회 중의원 총선거의 결과 및 그 함의

안보투쟁으로 해서 붕괴된 기시 내각의 후속으로 이케다는 1960년 7월 19일에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하여 제1차 이케다 내각을 발족시켰다. 이케다 정권은 이후 두 번의 해산총선거와 네 번의 내각 개조를 거쳐 1964년 11월 9일까지 지속되는 장기정권이었다. 이케다 수상

[36] 일본 위키디피아(ja.m.wikipedia.org)의 '所得倍増計劃' 부분과 일본 위키디피아(ja.m.wikipedia.org)의 '池田勇人' 부분에서 인용.

및 그 내각이 이처럼 장기집권을 할 수 있었던 것에는 무엇보다 안보투쟁의 여파를 극복할 수 있었던 때문이라고 하겠는데, 이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케다가 주창한 '소득배증' 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한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는 무엇보다도 〈표 5〉에서 보듯이 이케다 내각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것에서도 알 수 있다.[37]

〈표 5〉 당파별 득표수 및 득표율과 의석수 및 의석율, 1960년 11월 20일

정당명	당선의석수		의석율	득표수	득표율
	1960	1958년			
자유민주당	296/399	287	63.4%	22,740,271	57.56%
일본사회당	145/186	166	31.0	10,887,134	27.56
민주사회당	17/105		3.6	3,464,147	8.77
일본공산당	3/118	1	0.6	1,156,723	2.83
제파	1/34	1	0.2	141,941	0.36
무소속	5/98	12	1.1	1,118,905	2.83
총계	467/940	467	100.00	39,509,123	100.00

* 1960년의 당선의석수는 전자가 당선의석수이고 후자는 입후보자수임.
** 출처: 일본 위키디피아(ja.m.wikipedia.org)의 '衆議院議員總選擧の一覽' 부분에서 '第29回衆議院議員總選擧'.

이케다 수상의 자민당이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하겠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선거의 쟁점을 안보에서 경제로 전환할 수 있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케다 수상이 '소득배증' 정책을 제시한 것이 가지는 영향 및 의미가 지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케다 내각이 제시한 소득배증계획에 대해 사회당도 경제정책으로 대항할 밖에

37) 296석의 의미는 국민적 인기가 높았던 나카소네 수상 하에서 진행된 1986년의 중의원 총선거에서의 성적이 300의석이었음을 고려할 때 더욱 그에 근접한 성적을 올렸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없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38] 당초 안보를 쟁점으로 만들려는 사회당 등의 야당도 경제정책을 전면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선거전은 자민당의 페이스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사회당은 자당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빈곤대책'을 자민당의 '소득배증계획'에 의해 선수를 탈취당해 안보투쟁에서의 당세확대 추세가 타격을 받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이케다의 현실주의적 감각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소득배증론'은 처음에는 비현실적인 인기책으로 받아들여져, 야당이나 경제학자, 미디어, 일부 여당관계자, 그리고 많은 국민의 반응은 차가웠고,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와 물가상승이 일어나 실질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얘기가 너무 달콤하다, '그림의 떡' 등과 같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이케다는 국제정치경제의 커다란 흐름이나 국내에서의 동경올림픽개최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정비와 같은 공공사업이 진행되고, 가전분야를 중심으로 이노베이션이 시작되며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으로부터의 근면한 노동력에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케다에 대해서는 안보투쟁에서 보여준 강경한 입장 때문에 기시정권의 아류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예상이 있었다. 그러나 60년 안보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시작으로 한 미디어가 대중의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한 이케다는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전략을 취했다. 요시다 내각에서나 안보투쟁에서 정착된 자신의 반서민적이며 고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저자세' '관용과 인내'의 신조를 텔레비전을 통해 국민에게 보였고, '서민파'를 연출했다.[39] 또한 내각총리대신 관방홍보실(현재의 내

[38] 일본 위키디피아(ja.m.wikipedia.org)의 '衆議院議員總選擧の一覽' 부분의 '第29回衆議院議員總選擧'에서 인용.

[39] 宇治敏彦, 『首相列傳: 伊藤博文から小泉純一郎まで』, pp. 273-274.

각부대신 관방정부홍보실)의 기능을 확충하여 현재의 타운미팅(당시에는 '1일내각')과 같은 것을 추진했다. 9월 7일의 기자회견에서 "헌법개정은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 역시 이러한 변화된 이케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조했다고 하겠했다.

총선거에서의 자민당 압승 가능성은 7월과 8월 사이에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예시된 것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아오모리현, 사이타마현, 군마현의 각 지사선거에서 사회당이 추천(사이타마에서는 공인) 후보들이 모두 참패했던 것이다.[40] 이처럼 이케다 수상의 '소득배증' 정책은 안보투쟁의 그림자가 옅어지게 하는데 공헌했고, 자민당의 이케다라는 선택 및 대응에 대해 유권자들이 용인했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사회당의 분열이라는 측면을 꼽을 수 있다. 앞의 〈표 5〉에서 보듯이 1958년의 총선거에서는 하나였던 사회당이 1960년의 총선거에서 사회당과 민사당이라는 두 세력으로 나누어진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의 총선거에서 사회당과 민사당의 의석수 합이 1958년의 사회당 당선자수를 밑돌았다는 것은 사회주의 세력의 분열이 결국 자민당에 이득을 가져왔다는 것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10월12일에 발생한 사회당의 아사누마 (淺沼稻次郎) 위원장 암살사건은 다시금 정국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요인이었지만 이케다 수상은 동요를 진정시키는데 성공하여 선거에서의 승리를 얻어냈던 것이다.

40) 일본 위키디피아(ja.m.wikipedia.org)의 '衆議院議員總選擧の一覽' 부분의 '第29回衆議院議員總選擧'에서 인용.

제2장

‘록히드사건’에서 ‘미스터클린’ 총재의 취임까지

본 장에서는 1976년 12월의 제34회 중의원 총선거 결과가 나타난 배경과 그 의미를 검토한다. 동 선거와 관련해 자민당이 처한 위기상황은 다나카(田中角榮) 수상의 정치스캔들로부터 시작된다. 일본개조론으로 유명한 다나카 수상은 결국 록히드사건 등의 정치스캔들에 의해 사직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뒤를 이은 미키 수상에 의해 치러진 것이 제34회 중의원 총선거였다. 미키 수상은 소규모 파벌의 리더였음에도 미스터 클린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덕에 다나카 수상의 정치스캔들로 인해 실추된 자민당의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해서 수상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정치스캔들에 의한 정당적 위기를 리더십 교체라는 자민당의 대응조치가 제34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인지를 검토한다.

1. 위기상황: '다나카 금맥문제'라는 정치스캔들

'다나카 금맥문제'(田中金脈問題)란 1974년에 발생한 정치스캔들로서, 이로 인해 내각총리대신인 다나카가 사직하게 된다.[41] 이는 1974년 10월 9일에 발매된 잡지, '문예춘추' 11월호에 실린 다나카에 관한 특집에서 시작됐다. 60페이지에 달하는 동 특집에는 두 개의 르포가 실렸는데, 첫 번째의 다치바나(立花融)의 '다나카 가쿠에이 연구 - 그 금맥과 인맥'은 1969년부터 1970년에 걸쳐서 다나카 페밀리 기업군이 시노카와 (信濃川 河川數)에 위치한 약 4억 엔에 상당하는 토

41) 본 장의 '다나카 금맥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위키디피아(https://ja.wikipedia.org/wiki/)의 '田中金脈問題' 부분과 '田中角榮' 부분 외에도 다음을 참조함; 北岡伸一, 『自民黨: 執權黨の38年』, (東京: 讀賣新聞社, 1995), pp. 152-154; 渡邊昭夫 編, 『戰後日本の宰相たち』, (東京: 中央公論社, 1995), pp. 210-238; 宇治敏彦, 『首相列傳: 伊藤博文から小泉純一郎まで』, (東京: 東京書籍, 2002), pp. 294-307.

지가 직후에 건설성의 공사에 의해 시가 수백억엔이 되는 시노가와문제(信濃川問題) 등의 자산형성을 폭로했다. 두 번째의 코다마 (児玉隆也)의 '쓸쓸한 월산회의 여왕(淋しき越山会の女王)'은 월산회(越山会)의 금고지기였던 사토(佐藤昭)와 다나카의 관계 및 다나카파의 사토의 영향력을 소개했다.

이들 논문이 발표될 당시만 해도 다나카 수상은 기자회견에도 응하지 않고 노코멘트로 일관했는데, 10월 13일에 발매된 '뉴스위크', 10월 17일자의 '볼티모어 선'지, 10월 19일의 '워싱턴 포스트'지 등과 같은 서구의 미디어가 금맥문제를 소개하면서 일본 국내 보다는 외국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10월 22일에 다나카 수상이 마루노우치 프레스클럽에서 진행한 외국인기자회견에서는 모여든 300인의 내외 기자가 다나카 수상의 연설에는 관심없이 금맥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다나카 수상이 기자의 질문에 대해 해명하기는 했지만, 다음날 아침의 신문의 톱기사는 금맥문제였고 이로 해서 일본 국내에서도 정치문제로서 크게 주목을 받게 되어 내각지지율이 내려갔다.

이에 다나카 수상은 내각을 개조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으나 11월 11일에 단행한 내각개조는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야당이 금맥문제를 추급하기 위해 사토를 포함한 다나카 인맥과 연관된 자들을 국회로 초치하려 하자 결국 정권유지를 단념하게 됐던 것이다. 11월 26일에 "나 개인의 문제로 세간의 오해를 초래한 것은 공인으로서 불명, 부덕한 것이다", "나는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다케시다(竹下登) 관방장관이 다나카 수상의 망을 대독하는 형태로 퇴진을 표명하고, 12월 9일에 내각총사직했다.[42]

국회에서는 다나카 페밀리 기업군의 하나인 '신성기업'(新星企業)

[42] 일본 위키디피아(https://ja.wikipedia.org/wiki/)의 '田中金脈問題' 부분; 渡邊昭夫編, 『戦後日本の宰相たち』, 1995, p. 230.

이 면허가 종료됨에도 부동산 거래를 진행한 문제가 취급되었고, 경시청 동경지검특수부도 조사에 임해서 1975년 6월 23일에 신성기업 간부1인이 택지건물거래법위반과 상법의 특별배임죄로, 법인 '신성기업'과 신성기업 간부 1인이 택지건물거래법위반으로 각기 기소되었다. 12월 12일에는 신성기업 간부1인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엔, 법인 '신성기업'과 신성기업간부 1인에게 벌금 30만 엔의 유죄 판결이 나왔고, 확정됐다.

다나카 수상과 관련된 정치스캔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퇴진에도 불구하고 재임시에 불거진 록히드 사건이 다나카 수상은 물론 자민당을 흔들었다. 록히드사건은 미국의 항공기제조회사인 록히드에 의해 주로 동 회사의 여객기 수주를 둘러싼, 1976년 2월에 밝혀진 세계적인 대규모 정치부패(오직)사건이다.[43]

이 사건에는 일본이나 미국, 네덜란드, 요르단, 멕시코 등의 많은 국가 정재계 인사들이 포함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나카(田中角英) 수상은 국내항공회사인 전일공(全日空)의 신 와이드보디 여객기 도입선정에 있어서 수뢰와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위반의 혐의로 1976년 7월 27일에 체포되었다. 이를 전후해서는 다나카 전 수상 이외에도 사토 (佐藤孝行) 운수정무차관이나 하시모토 (橋本登美三郎) 전 운수대신 2명의 정치가도 체포되었다.

또한 수뢰, 증뢰 쌍방의 입장에 놓인 전일공의 와카 (若狭得治) 사장 및 그 외의 이사와 사원들, 록히드의 판매대피점인 마루베니의 이사 및 사원, 행동파 우익의 큰 손이라고 알려지고 폭력단이나 CIA와도 깊은 관계를 가진 고다마 (児玉誉士夫), 그리고 고타마의 친구인 '정상'으로 불려지는 국제흥업사주인 오사노(小佐野賢治)과 함께 체포되

43) 록히드사건의 전개에 대해서는 상기한 일본 위키디피아(https://ja.wikipedia.org/wiki/)의 '田中角榮' 부분 외에도 다음을 참조: 渡邊昭夫 編, 1995, pp. 220-224; 宇治敏彦, 『首相列傳: 伊藤博文から小泉純一郎まで』, 2002, pp. 296-299.

었다. 또한 관계자 중에서 다수의 의혹사망자가 나타나는 등, 대전이후 최대의 의혹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1976년 2월에 미국의회 상원에서 진행된 상원외교위원회 다국적기업소위원회(프랭크 차치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차지위원회')에 있어서의 공청회에서 발각된 것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외교문제로도 번지게 됐는데, 다나카가 금맥문제로 수상을 사임한지 약 1년 3개월 후, 그리고 전일공에 L-1011 트라이스타가 납입된지 약 2년 후인 1976년 2월4일에 미국의회 상원의 외교위원회 다국적기업 소위원회에서 록히드사가 전일공을 시작으로 하는 세계 각국의 항공회사에게 L-1011 트라이스타를 판매하고, 동기의 개발이 진행되었단 1970년대 초두에 각국정부관계자에게 거액을 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자민당의 대응: 미키 내각의 성립과 자민당 내 파벌역학

다나카 내각의 총사직에 따른 미키 내각의 출범은 의외의 진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자민당의 당내역학 또는 총재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파벌역학의 관점에서 그렇다고 하겠는데, 〈표 6〉에서 보듯이 미키파는 자민당 내에서도 소수파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미키 수상 및 그 내각의 출범이 자민당 내의 총재선거에 의한 것이 아닌, 시이나재정이라고 하는 대화에 의한 선출에 따른 것이기 때문인데, 본 절에서는 미키 수상을 가능하게 만든 시이나재정의 상황과 미키 수상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한다.[44]

44) 미키 내각의 성립과정 및 시이나 재정과 관련해서는 일본 위키디피아 (https://ja.wikipedia.org/wiki/)의 '三木武夫' 부분과 '椎名悦三郎' 부분 외에도 다음을 참조함: 田中國夫, 『一寸先の闇』, (東京: 共同通信社, 1983), pp. 24-28; 北岡伸一, 『自民黨: 執權黨の38年』, (東京: 讀賣新聞社, 1995), pp. 157-172; 渡邊昭夫 編, 『戰後日本の宰相たち』, (東

〈표 6〉 자민당 파벌별 당선자 수, 1972년과 1976년의 총선거 후

파벌명	의석수	
	1972년 총선거후	1976년 총선거후
후쿠다파(八日会, 福田赳夫派)	55	53
다나카파(七日会, 田中角栄派	49	43
오히라파(宏池會, 大平正芳派)	45	39
나카소네파(新政同志会, 中曽根康弘派)	38	39
미키파(政策懇談會, 三木武夫派)	36	32
시이나파(交友クラブ, 椎名悦三郎派)	18	11
미주다파(巽会, 水田三喜男派)	13	11
이시이파(水曜会, 石井光次郎派)	9	4
후나다파(一新会, 船田中派)	9	8
후지야마파(愛正会, 藤山愛一郎派)	2	-
무파벌	8	9

출처: 일본 위키디피아(ja.m.wikipedia.org)의 '衆議院議員總選擧の一覽' 부분에서 第33回와 第34回 衆議院議員總選擧의 '自民黨の派閥別議席數'.

미키 다케오가 수상직에 오르고 내각을 출범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역설적이지만 그의 파벌이 소수파벌이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것인데, 소수파벌이므로 다나카 수상을 비롯한 대파벌이 견제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미키 수상이 평소 미스터 클린이라고 불려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내개혁에 앞장서는 인물로 알려져, 다나카 수상의 퇴진을 초래한 정치스캔들로 해서 얼룩진 자민당의 이미지를 일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선 시이나재정의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퇴진을 결의한 다나카가 1975년 10월 26일에 시이나(椎名悦三郎) 부총재에게 일시적으로 내각을 담당해줄 수 있는가 하는 의사타진을 시도했던 것에서 시작된다. 금맥문제로 상처입은 다나카는 시이나에게 정권을 맡기

京: 中央公論社, 1995), pp. 240-259; 宇治敏彦, 『首相列傳: 伊藤博文から小泉純一郎まで』, (東京: 東京書籍, 2002), pp. 308-311.

고 '일시적인 퇴진'을 한 다음에 재등판을 추진할 복안이었던 것인데, 시이나로서도 정권획득의 의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건강문제도 있어서 다나카의 요청을 거부하고 조정역을 담당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나카의 후계포석이나 시이나재정은 당내역학 및 시이나의 의도에 따라 몇 차례의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첫째는 다나카의 후계포석이 좌절되는 과정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나카는 시이나 부총재로 하여금 정권을 맡도록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는데, 그럼에도 그는 11월 11일의 내각개조을 통해 시이나를 부총재로 유임시켜 후계자로 상정하는 시도를 추구했다. 하지만 이 역시 총재경선에서의 총재, 총리 취임을 추구했던 오히라 외상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처럼 다나카는 자신의 후계에 대해서 자신의 포석을 전혀 둘 수 없는 가운데 포드 미 대통령이 아시아방문을 끝내고 귀국하는 11월 26일에 퇴진을 표명했던 것이다.

다나카의 후계총재후보로서는 미키, 후쿠다, 오히라가 거명되었다. 세 사람 중에서 다나카의 맹우로 알려진 오히라는 숫적인 우세를 기반으로 총재공선에서의 출마를 주장하고, 수적으로 열세인 미키나 후쿠다는 대화로서의 선출을 주장했다.[45] 특히 소수파벌을 이끄는 미키로서는 공선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대화에 의한 선출에 운을 걸 수 밖에 없었다. 숫적 우세를 가진 오히라는 미키와 후쿠다를 함께 또는 따로 직접 회담을 추진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이들 세 후보자 간에는 해결을 보진 못했다.

반면에 조정역이 된 시이나는 파벌을 '우코우노슈'(烏合の衆; 규율도 통제도 없이 단지 모여있을 뿐인 집단)로 생각하며, 그런 집단의 정점에 선 파벌영수는 '총재선거'라는 '쿠사케이바'(草競馬; 마권판매도 없이 진행하는 아마추어 경마)라고 보고 있었다.[46] 따라서 시이나는

45) 田中國夫, 『一寸先の闇』, 1983, p. 25; 北岡伸一, 1995, p. 165; 渡邊昭夫 編, 1995, p. 250.
46) 北岡伸一, p. 158. 宇治敏彦, 2002, p. 308.

나다오 히로기치(灘尾弘吉), 호리 시게루(保利茂), 마에오 시게사부로(前尾繁三郎)라는 장노의원에 의한 잠정정권을 수립해 자민당을 새롭게 하고, 그 후에 본격정권을 수립하는 구상을 계획하고 있었다. 해서 후계총재를 둘러싼 자민당 내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는 중에 '시이나에 의한 잠정정권안이 부상했다. 그러나 11월 29일 시이나가 미키, 후쿠다, 오히라, 나카소네의 실력자와 개별 회담을 진행중에 시이나가 오히라에 대해서 시이나잠정정권의 가능성을 시사하자 오히라는 시이나의 발언에 불쾌감을 보이며, 심판(행사; 스모에서의 심판)이 삿바를 둘렀다"(行司がまわしを締めた)고 시이나가 정권획득에 욕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리크했다.[47]

이러한 가운데 미키는 대화에 의한 총재선거로 자신이 선출될 수 있도록 움직였다. 7월에 부총재 겸 환경청장관을 사임한 후에 '당의 근대화'를 계속 추구할 것을 제시하며 다나카 개인에 대한 비판은 삼갔고, 다나카의 사의표명 후 민사당의 사사키(佐々木良作)와 비밀리에 만나서 중도신당 결성 등과 같은 민사당과의 연대공작도 추구했던 것이다.[48]

오히라의 리크에 의해 잠정정권안이 좌절되자 시이나는 호리(保利茂)에 의한 잠정정권을 다시금 추구했지만 이 역시 그에 의한 정권창출 야욕으로 보여질 것이기에 단념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시이나는 장로에 의한 잠정정권이 아닌 '미키, 후쿠다, 오히라, 나카소네'와의 5자 회담 자리에서 후계를 지명하게 되었다. 11월 30일의 회담 자리에서 먼저 후계총재후보는 실력자 4인 밖에 없다는 것을 공표한 시이나는 나카소네를 진행역으로 지명해서 간사장이나 재무위원장, 그리고 경리국장을 총재파벌에서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고, 다음 날인 12월 1일에 후계총재로 결론을 내겠다고 얘기했다.[49]

---

47) 일본 위키디피아 (https://ja.wikipedia.org/wiki/)의 '三木武夫' 부분과 '椎名悦三郎' 부분.

48) 위의 글.

최종적으로 시이나는 미키의 지명을 결단했다.[50] 이유로서는 먼저 미키는 이케다 내각 시대에 당조직조사회장으로서 미키답신을 정리했고, 다나카 내각의 각료를 사임하여 당근대화를 호소했고, '클린 미키'야말로 금권문제로 퇴진하게 된 다나카의 뒤처리를 하기에 합당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미키는 당시 후나다(船田中)에 이어서 37년 이상의 의원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시이나가 잠정정권의 수반으로 생각한 사람들 보다도 의원경험이 길었다. 장로에 의한 잠정정권안이 붕괴된 시이나에게 있어서 미키는 장로의원에 준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또한 실제적인 문제로서 미키 이외에 지명할 수 있는 인물이 자민당 내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유로서 제시됐다. 먼저 나카소네는 그 시점에서는 총재취임을 노리지 않고 조정역으로 있었다. 여론의 강력한 비판을 받으며 퇴진하게 된 다나카와 친했던 오히라를 지명하는 것은 '다나카아류정권'을 지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자민당으로서도 큰 마이너스가 될 것은 자명했던 것이다. 또한 오히라가 시이나잠정정권안을 리크한 것은 시이나의 심상을 해치는 것이기도 했다. 다른 한편 후쿠다는 다나카와의 격렬한 대립으로 미키와는 다르게 공연하게 다나카파나 오히라파의 강력한 반발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시이나와 후쿠다와의 사이에는 1962년의 기시파 분열 때부터 고집이 있었고 아직도 그 잔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당내에서 강력한 대립이 있는 가운데 총재공선을 치루면 그 대립이 더욱 격해져 자민당의 이미지에 마이너스가 되고, 분열의 위기도 부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잠정정권안이 리크된 상황에서 4인의 실력자 중에서 남겨진 인물은 미키였고, 총재공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미키를 지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49) 위의 글.

50) 田中國夫, 『一寸先の闇』, p. 25; 渡邊昭夫 編, p. 245; 宇治敏彦, p. 308.

미키는 소수파벌의 영수이고, 그 당내기반의 약함이 오히려 좋게 작용한 면도 있다. 시이나도 다나카도 미키라면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키는 야당, 특히 민사당과의 연대 얘기가 구체화되는 중이기도 했다. 당분열의 씨를 없애기 위해서도 미키의 지명은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12월 1일, 전날에 이어서 개최된 5자회담의 모두에 시이나는 미키를 후계로 추천한다는 재정문을 읽어 내리고는 곧바로 자리를 떳다. 재정을 받은 미키는 '청천벽력'이라며 의외의 결론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전에 자신이 지명될 것을 알고 있었다.[51] 재정직후 미키는 후쿠다와 회담하고 "미키 내각은 당신과의 공동내각이라는 생각이고 경제문제는 일임하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후쿠다로부터 재정인정을 확인했다.[52] 대화로서의 결착을 주장한 후쿠다로서는 시이나재정을 거절하눈 대의명분이 없었는데, 이는 나카소네파도 마찬가지여서 12월 1일에 재정인정을 표명했고, 사토 에이사쿠 등의 당고문이나 미주다파, 이시이파 등의 중간파도 재정인정을 명확히 했다.

반면에 다나카파와 오히라파는 시이나 재정을 그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나카파는 영수인 다나카의 금맥문제가 혼란의 계기가 되었던 점도 있어서 재정에 강하게 반발할 수 없었다. 또한 선술한 바와 같이 당내기반이 약한 미키는 다나카로서는 조정하기 쉬운 상대라는 생각도 있었다. 다른 한편 오히라는 끝까지 공선에서의 총재선출을 고집하고 총무회라는 당의 정식기관에서 승인된 후에야 자신의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미키파, 후쿠다파, 나카소네파가 일찌감치 재정인정을 명확하게 하고 중간파나 당고문, 그리고 다나카도 재정인정의 의향을 제시한 속에서는 오히라도 저항을 계

51) 일본 위키디피아 (https://ja.wikipedia.org/wiki/)의 '三木武夫' 부분과 '椎名悦三郎' 부분.
52) 위의 글.

속할 수 없었고 결국 시이나재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시이나재정에 의한 미키 수상의 선출은 다나카 금맥문제 및 록히드사건과 같은 정치스캔들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민당의 의도적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내파벌역학이 극심한 가운데서 안보투쟁과는 달리 대화에 의한 선출이라는 방식이 받아들여진 것도, 물론 오히라파의 반대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케다 내각의 출범 때와는 달리, 자민당 내에서 위기감이 고조된 것의 반증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3. 1976년 12월의 제34회 중의원 총선거

다나카 수상의 퇴진과 그에 대한 시이나재정에 의한 미키 수상의 선출은 정치스캔들이라는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자민당의 노력이고 해결책이었다고 하겠는데, 그러한 노력이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본 절에서는 1976년 12월에 있었던 제34회 중의원 총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검토한다.

〈표 7〉 당파별 획득 의석수, 1976년 12월의 제34회 중의원 총선거

정당명	당선의석수/입후보자수			의석율	득표수	득표율
	1976	1972	증감			
자민당	249석/320명	271	-22	48.7%	23,653,626	41.78
일본사회당	129/162	118	+11	24.1	11,713,008	20.69
공명당	55/84	29	+26	10.8	6,177,300	10.91
민사당	29/51	19	+10	5.7	3,554,075	6.28
일본공산당	17/128	38	-21	3.3	5,878,192	10.38
신자유구락부	17/25	-	(17)	3.3	2,363,984	4.18
제파	0/17	2	-2	0.0	45,113	0.08
무소속	21/112	14	+7	4.1	3,227,463	5.20
합계	511/899	491	-	100.0	56,612,761	100.0

*: 신자유구락부는 자민당 소속의원들이 탈당하여 만듦.
**: 출처: 일본 위키디피아(ja.m.wikipedia.org)의 '衆議院議員總選擧の一覽' 부분에서 第33回와 第34回 衆議院議員總選擧.

1976년 12월의 제34회 중의원 총선거는 전후 처음으로 임기4년 만료에 의해 치러진 총선거로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후의 일본국헌법 하에서 진행된 유일의 임기만료에 의한 것이었다.[53] 또한 각 신문에서는 록히드선거라고도 널리 알려진 것이었는데, 그러한 이름에서 암시하듯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자민당의 대패라는 결과를 낳았다. 자민당의 대패는 무엇보다 이전의 제33회 중의원 총선거(1972년) 결과인 271석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249석을 얻는데 그쳤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혁신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당과 민사당은 각기 11석과 10석을 증가시킨 118석과 29석을 얻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외에도 공명당이 26석의 의석수 증가를 보이고, 무소속 의원들 역시 종전의 14석에서 21석으로 의석수를 늘렸다는 것은 자민당 및 자민당의 금권정치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공명당이 획득한 55석은 1955년 이후 자민과 사회 양당 이회에 처음으로 예산안의 조정과 관련된 동의를 단독으로 제출하는데 필요한 51의석을 돌파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의 최대승자는 신자유구락부라고 할 수 있다. 1976년 6월에 고노(河野洋平) 등이 자민당의 정치부패 체질을 비판하면서 이탈해 결성된 신자유구락부는 총선거전에는 5명의 중의원 의원밖에 없었지만 유권자로부터 청신한 보수당의 이미지가 강하게 지지받으면서 3배가 넘는 당선자를 배출했던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압승을 보였는데, 고노나 다카와(田川誠一)가 있는 시나가와현에서는 다섯 개 선거구 전부에서 당선됐다. 자민당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반발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자민당의 대패는 상기한 바와 같이 다나카 금맥문제 또는 자민당에 의한 금권정치에 대한 비판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53) 제34회 일본중의원 총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함: 일본 위키디피아(ja.m.wikipedia.org)의 '衆議院議員總選擧の一覽' 부분에서 第34回 衆議院議員總選擧

자민당과 관련된 비판이 다나카 수상의 퇴진에도 불구하고 유지됐던 것에는 그의 금맥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일정과 자민당 내의 갈등 때문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즉, 다나카 수상이 금맥문제의 정국화를 받아들이고 1974년 12월에 퇴진했지만 1975년부터는 록히드 사건에 대한 다나카 관여의 의혹이 표면화되었던 것이다. 또한 다나카를 이은 미키 수상이 록히드사건의 추급에 대해 적극 자세를 보임에 따라 다나카파는 물론이고 라이벌인 후쿠다파를 포함한 자민당내의 대다수 파벌로부터 반발을 사서 소위 말하는 '미키낙마시키기(三木おろし)'라는 갈등양상이 자민당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민당 내에서의 미키파벌은 미약한 것이었고, 따라서 반미키파의 힘이 강한 것이었다. 미키수상은 중의원 해산에 의한 총선거를 거쳐서 당내지도력의 회복을 추구했지만, 당내에서는 그러한 의도를 봉쇄하려는 목소리가 매우 컸고 결국 미키 수상은 수상이 가진 중의원해산권을 사용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의 총선거를 실행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자민당은 사실상 분열된 채로 선거전을 치루게 되었고, 그 결과 정치부패에 대한 비판을 받은 자민당은 1955년의 결당 이후 처음으로 공인후보의 당선자수가 중의원에서의 과반수를 미치지 못하게 됐다. 실제로는 보수계 무소속의원의 추가공인으로 과반수를 확보했지만,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미키 수상이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이러한 선거결과에 의해 일본은 1940년대 이래의 '여야당 백중국회'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앞서 사회당이 의석수를 증가했다고 했지만, 의석수의 증가나 록히드사건이라는 바람을 고려하면 사회당의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의 제34회 중의원 총선거는 대도시부에서의 유권자 증가에 따라 정수시정이 시행되어 총수는 491에서

511로 20석 증가했던 것이다. 특히 사회당과 같은 혁신세력이 그동안 대도시부에서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였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전 야당공투노선을 지향하는 나리타(成田知巳)위원장과 사공민노선의 에다(江田三郎) 위원장 사이의 대립이 격화됐기 때문이었다. 이 선거에서 낙선한 에다는 이후 사회당을 이탈하여 사회시민연합의 길을 걷게 됐다.

자민당 이상으로 이번 선거에서 대패한 것은 공산당이었다고 하겠다. 지난 번의 총선거에서 약진을 보인 공산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민주연합정권의 도래가 가까이 왔다고 자평했지만, 사회당에 대한 공투확대의 제안이 오히려 반발을 사서 자공대결에 대한 경계감으로 보수층의 반공의식을 자극했던 것이다. 또한 지난번의 선거에서 붐을 형성했던 반자민의 부동표가 신자유클럽으로 흘러가는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다.

자민당의 대패가 다나카 수상의 금맥문제 및 록히드사건, 즉 정치부패에 대한 심판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다나카 수상 하에서 그 전에 치뤄진 제33회 중의원 총선거 결과와 비교해도 알 수 있다.

〈표 8〉 당파별 득표수 및 득표율과 의석수 및 의석율, 제33회 중의원 총선거

정당명	당선의석수/입후보수			의석율	득표수	득표율
	1972	1969	증감			
자유민주당	271/339	288	-17	55.2%	24,563,199	46.85
일본사회당	118/161	90	+28	24.0	11,478,742	21.90
일본공산당	38/122	14	+24	7.7	5,496,827	10.49
공명당	29/59	47	-18	5.9	4,436,755	8.46
민사당	19/65	31	-12	3.9	3,660,953	6.98
제파	2/15	-	+2	0.4	143,019	0.27
무소속	14/134	16	-2	2.9	2,645,582	5.05
총계	491/895	486	-	100.0	52,425,582	100.0

* 출처: 일본 위키디피아(ja.m.wikipedia.org)의 '衆議院議員總選擧の一覽'부분에서 第32回와 第33回 衆議院議員總選擧.

〈표 8〉에서 보듯이 자민당은 271석을 획득했는데, 이는 그 이전인 사토 수상 하에서의 제33회 중의원 총선거 결과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지만, 투표율에 있어서는 71.76%를 기록하여 이전의 68.51% 보다는 상승한 가운데 얻은 것이었다. 다나카 수상의 인기, 예를 들어 그의 전력에 비추어 도요토미(풍신수길)과 비교되는 정도의 인기를 고려할 때, 1972년의 선거결과는 자민당에 대한 투표율이 하락추세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는 다나카 수상의 헬리콥터를 이용한 유세연설돌기로 유명한 1974년 7월의 참의원 통상선거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표 9〉에서 보듯이 제10회 참의원통상선거도 73%대(지방구, 73.20%; 전국구, 73.20%)의 투표율을 보였지만, 선거결과는 참의원에서의 과반수 확보를 위한 63석에 1석 모자라는 62석이었다. 즉, 다나카 수상의 인기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에 대한 투표율은 하락추세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1976년의 격감은 정치스캔들에 의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표 9〉 당파별 당선자수 등, 제10회 참의원통상선거, 1974년 7월

정당명	개선			비개선	총의석수
	지방구	전국구	소계		
자민당	43	19	62	64	126
일본사회당	18	10	28	34	62
공명당	5	9	14	10	24
일본공산당	5	8	13	7	20
민사당	1	4	5	5	10
그 외	1	0	1	-	1
무소속	3	4	7	2	9+1?=10
합계	76	54	130	122	22

출처: 일본 위키디피아(ja.m.wikipedia.org)의 '參議院議員通常選擧の一覽'에서 '第10回參議院議員通常選擧'.

제3장

‘동경 사가와규빈’사건에서 야당으로의 전락까지

본 장에서는 자민당을 야당으로 전락시키는 계기를 제공한 '동경 사가와규빈'(東京佐川急便)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즉, 정치적 위기로서의 '동경 사가와규빈'사건이라는 정치적 스캔들을 위기로 하여,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선거개혁법안과 그에 따른 당내갈등,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난 1993년 7월의 제40회 중의원 총선거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정치스캔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정당적 위기에 리더십교체와 선거제도개혁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대응조치를 취한 자민당이 어떤 이유에서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제40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획득한 223석은 최대정당의 위상을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비자민연합의 형성을 가능하게 만들고 자민당으로 하여금 야당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55년체제의 형성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정권교체였는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요인은 무엇인지, 특히 자민당 내에서 의원들의 탈당을 막지 못하고 선거후 다수파공작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1. 위기로서의 '동경 사가와규빈'사건과 그에 따른 당내분규

'동경 사가와규빈'사건이란 1992년 2월 14일에 동경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가 동경 사가와규빈의 와타나베 사장 등 4인을 동경 사가와규빈에게 952억 엔의 손해를 안겼다는 이유로 '특별배임' 용의로 체포함으로서 본격화된 정치스캔들이었다.[54] 동경지방검찰청은 수

[54] '동경 사가와규빈'사건에 대해서는 일본 위키디피아 (https://ja.wikipedia.org/wiki

천억엔 단위의 자금이 비합법조직에 보내기는 과정에서 부정한 헌금이나 융자 등이 있다고 보고 추급했던 것이다. 1992년 9월 28일에는 동경사가와규빈으로부터 5억 엔의 정치헌금을 받은 혐의로 자민당의 실세로 불리우는 가네마루가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동 사건의 발단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7년에 자민당의 차기수상유력후보인 다케시타(竹下登)는 다카마쓰시에 본부를 둔 우익단체인 일본황민당(日本皇民党)에 의한 집요한 칭송비판(ほめ殺し)을 받았던 것이다.[55] 이는 은혜를 받은 다나카 카쿠에이를 다케시다가 배신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케시다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절친인 가네마루(金丸信)에게 상담하고, 가네마루는 '동경 사가와규빈'의 와타나베(渡辺広康) 사장에게 폭력단 稲川会의 会長인 이시이(石井隆匡)와 만나 중개를 의뢰했던 것이다. 다케시다는 이후 동경도내의 호텔에서 가네마루, 와타나베, 그리고 오자와(小沢一郎)와 함께 대책을 협의하고, 그 결과 다케시다가 다나카 저택을 방문하여 사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방문은 문앞에서 거절당함으로서 실패하게 되었지만 사건은 이것으로 조용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 사건의 중재역을 담당한 와타나베 사장과 이시이 회장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진행되고 그러한 거래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에 있었다고 하겠다. 다케시다는 이 사건의 수주 후인 1987년 11월에 수상에 취임하는데, 와타나베 사장의 '동경 사가와규빈'은 이시이(石井隆匡)가 경영권을 보유한 이와마 컨트리클럽(旧平和相互銀行グループ)를 비롯하여 이시이와 관계되는 회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융자나 거액의 채무보증을 진행했던 것이다. 동경 사가와규빈이

/)의 '東京佐川急便事件' 부분을 참조함.

55) 호메고로시(ほめ殺し)를 '칭송비판'으로 번역했는데, 원 뜻은 냉소적인 칭찬 또는 칭찬하면서 책망하는 것을 의미함.

채무보증을 한 융자의 총액은 약 4395억 엔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 문제를 키운 것은 1991년 2월부터 본격화된 버블경제의 붕괴가 이시이의 이자 지불 연체로 이어졌고, 거액부채의 반제불능이 확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동경 사가와규빈의 간부는 이시이에게 반제계획의 제출을 요청했지만, 이시이는 오히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동경 사가와규빈은 더 큰 채무보증을 떠안게 되었다. 결국 막대한 채무를 안게된 동경 사가와규빈은 도산될 위기의 직전에 모기업인 사가와규빈에게 흡수되었고, 와타나베를 비롯한 동경 사가와규빈의 간부들은 1991년 7월에 해고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검찰에 의해 신착의무위반의 용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함께 기소된 가네마루는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의 기재누락을 인정하고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오시마(青島幸男)가 의원사직을 추구하면서 헝거스트라이크를 결행하자 여론이 맹반발하게 되어 결국 가네마루는 의원사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가네마루의 기소 및 의원직 사퇴는 그 자체로서도 자민당의 위기였지만, 자민당 내의 최대파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경세회(經世會)의 분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자민당에 있어서 큰 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경세회는 다나카파를 이은 다케시다파가 내세운 조직인데, 다케시다가 리크루트사건으로 수상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가네마루가 좌장으로 이끌었던 것이었다. 그런 가네마루가 물러남에 따라 경세회는 오자와와 가지야마에 의해 운영됐는데, 동경 사가와규빈 사건의 처리를 놓고 두 사람이 대립했던 것이다.[56] 오자와는 5억 엔의 정치헌금을 둘러싸고 검찰에의 철저항전을 주장한 반면에, 가지야마(梶山静六)는

[56] 다케시다와 가네마루의 대립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함: 久保紘之, 『田中角榮とその弟子たち: 日本權力構造の悲劇, (東京: 文藝春秋, 1995), pp. 293-381.

조기의 사태수습을 시도하기를 추구했던 것이다.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오자와와 가지야마는 이에 의해 결정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는데, 이는 경세회의 내부균열을 심화시키고 결국 파벌후계를 둘러싼 내부항쟁의 계기를 제공했다.

동경 사가와규빈 사건은 자민당의 경세회 외에도 다른 정당의 인물들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1992년 2월에 동경 사가와규빈은 니가타 출신인 일본사회당 요시다(吉田和子) 의원의 파티권을 500만원어치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암흑헌금의혹으로 급부상됐던 것이다. 또한 니가타 출신의 사회당의원인 도로이(筒井信隆)의 헌금의혹도 부상되어 당직을 사임해야 했고, 니가타현의 지사인 가네코(金子清)도 동경 사가와규빈의 1억 엔 헌금의혹으로 1992년 9월에 시작했다. 이 외에도 다른 대물정치가들의 의혹도 있었느나 밝혀지지 않은 채, 그리고 그 암흑자금루트도 해명되지 않은채 사건은 끝을 맺었다.

이 사건은 1988년의 리쿠르트사건과 함께 정계에 다대한 영향을 미쳤다. 자민당과 사회당에 대한 의혹이 가져온 중대한 사건이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그로 해서 기성정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치불신이 심해졌던 것이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가네마루의 실각과 그에 따른 경제회의 분열을 가져왔던 것이다. 즉, 가네마루의 실각에 의해 가지야마(梶山静六)가 자민당 간사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오자와는 비주류파가 되면서 하타 츠토무(羽田孜), 와타베(渡部恒三)와 함께 경세회(経世会)를 이탈하여 '하타그룹'을 출범시켜 자민당이 야당으로의 전락하는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다.

2. 대응으로서의 선거제도개혁과 그 좌절

'동경 사가와규빈'사건이라는 정당적, 정치적 위기에 대응해 자민당, 특히 그 집행부는 우선 사회적 요구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법안들의 성립을 추진했다. 예를 들어, '리쿠르트 사건'으로 인한 다케시다 수상의 퇴임에 따라 성립된 가이후(해부준수) 수상은 정치개혁 3법안(정당조성법, 정치자금규정법의 일부 개정 법률, 공직선거법의 일부 개정 법)의 성립을 추진했으나 좌절됐고, 다시금 '동경 사가와규빈'시건에 직면한 미야자와 내각은 상기한 3법안에 '중의원의원선거구획정 심의회설치법안'을 추가하는 정치개혁 4법안을 추진했던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정치개혁법안의 심의과정을 검토하는데, 우선 이러한 일련의 정치개혁 논의의 발단이 된 '리쿠르트'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검토한다. 리쿠르트사건이란 1988년 6월 18일에 발각된 정치자금의 수뢰사건으로, 에후쿠(江福浩正) 리쿠르트사 회장이 자사의 정치적, 재계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유력정치가, 관료, 통신업계 유력자에게 리쿠르트사의 자회사인 리쿠르트 코스모스사의 미공개주를 양도한 사건이었다.[57] 이것이 대형의 정치스캔들로 발전한 것은 아사히신문이 1988년 6월 18일에 가와사키역 서구의 재개발에 있어서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가와사키시 공무원에게 코스모스주가 양도됐다고 보도함으로 시작되었다.

동 보도는 당시 재개발이 진행된 메이지제당 가와사키공장부지의 재개발사업이었던 가와사키테크노피아지역에 있어서 원래 용적률인 500%를 800%로 인상하여 고층건축을 가능하게 만들려는 것이 뇌물의 목적이었다고 제시했다.[58] 7월에는 일본의 매스컴 각사가 후속보

[57] '리크루트 사건'(リクルート事件)에 대해서는 일본 위키디피아 (https://ja.wikipedia.org/wiki/)의 'リクルート事件' 부분을 참조함.

도를 내면서 나카소네 전 수상, 다케시다 수상, 미야자와 부총리 겸 장상, 아베 신타로 자민당간사장, 와타나바 미치오 자민당정조회장 등과 같은 자민당의 대물 정치가에게도 코스모스주가 양도된 것이 발각되었다. 90인을 초과하는 정치가가 이 주의 양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외에도 '정부세제조사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직을 담당한 구몬(公文俊平) 교수와 같은 다양한 인물들에게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쿠르트사건에 의해 다케시다 수상이 사임함에 따라 가이후(海部俊수) 수상이 취임하게 되었다. 가이후 수상의 취임은 〈표 9〉에서 보듯이 압도적인 표차이로 자민당총재에 당선됨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는데,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래 미키파를 이은 고모토파 소속으로 파벌의 수장도 아닌 처지에서 이처럼 압도적인 표차이로 총재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에는 역시 리쿠르트사건으로 사임할 수 밖에 없었던 다케시다 수상이 자신 및 자파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다. 가이후 수상은 미키 수상의 후계자로 미스터 클린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도 한 몫했다고 하겠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다나카 수상에서 미키 수상으로 이어졌던 것의 재판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 1989년 8월 8일, 자민당 총재선거

후보자 명	가이후(海部俊樹)	하야시(林義郎)	이시하라(石原愼太郎)
득표수	279	120	48

* 출처: 일본 위키디피아(ja.m.wikipedia.org)의 '自由民主黨總裁選擧' 부분.

58) 위의 글.

〈표 10〉 자민당 내 파벌구도, 제39회 및 제40회 중의원 총선거에 따른 중의원 의원 수

파벌명	중의원 의원수	
	1990년	1993년
청화회(미츠즈카파, 三塚博파)	61	56
굉지회(미야자와파, 宮澤喜一파)	62	55
정책과학연구소(와타나베파, 渡邊美智雄파)	48	52
경세회(다케시다파)/평성연구회(오부치파, 小淵惠三파)	69	29
신정책연구회(고모토파, 河本敏夫파)	26	21
목요그룹(二階堂구락부)	4	-
정진회(가토그룹, 加藤六月그룹)	-	6
무파벌	20	11

*: 일본 위키디피아(ja.m.wikipedia.org)의 '衆議院議員總選擧の一覽' 부분에서 第39回와 第40回 衆議院議員總選擧의 派閥別當選者數.

내각을 출범시킨 가이후 수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쿠르트' 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치부패사건으로 실추된 자민당의 이미지를 회복하고자 정치개혁법안의 실현을 추구했다. 이러한 자민당의 가이후 수상이라는 선택은 미키 수상에 의해 치러진 제34회 중의원 선거보다는 좋은 결과를 낳았다.

〈표 11〉에서 보듯이 자민당은 275석을 차지했는데, 이는 나카소네 수상에 의해 실시된 이전의 제38회(1986년)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거둔 300의석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다나카 수상이 재임시절에 거둔 제33회 중의원 총선거의 271석을 초과한 것이었다. 특히 동 선거는 '리쿠르트'사건 이후에 실시되었다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1989년 4월의 소비세도입 이후 처음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상기한 선거결과는 결코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1〉 제 39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결과, 1990년 2월

정당명	의석수		득표수	득표율
	1990년	1986년		
자유민주당	275	300	30,315,417	46.11
일본사회당	136	85	16,025,472	24.39
공명당	45	56	5,242,675	7.98
일본공산당	16	26	5,226,986	7.96
민사당	14	26	3,178,949	4.84
사회민주연합	4	4	566,957	0.86
진보당	1	-	281,793	0.43
신자유클럽	-	6		
무소속	21	9	4,807,520	7.32
합계	512	512	65,645,769	100.00

출처: 일본 위키디피아(ja.m.wikipedia.org)의 '衆議院議員總選擧の一覽'부분에서 第39回와 第38回 衆議院議員總選擧.

물론 이러한 결과 뒤에는 1989년 가을에 일거에 추진된 동유럽의 민주화에 의해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의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됨에 따라 이 선거의 쟁점을 '체제선택'이라고 설정한 자민당의 선거전략이 성공했다는 측면도 강했다.[59] 양호한 경제('버블경기')를 향유하는 국민의 반공 및 보수적 의식에 호소하고, 또한 참의원에서의 참패나 가이후 내각의 인기를 바탕으로 유권자로부터 '이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에도 성공했다.[60] 즉, 의석수 감소를 소폭으로 멈추게 하고, 추가공인을 포함해서 의석수 286석으로 '중의원에서의 단독과반수'를 획득했다.

가이후 수상의 이러한 선거승리에도 불구하고 세력기반 또는 파벌기반이 약한 가이후 수상으로서는 정치스캔들이라는 위기에 대응해

59) 일본 위키디피아(ja.m.wikipedia.org)의 '衆議院議員總選擧の一覽'부분에서 第39回 衆議院議員總選擧.

60) 北岡伸一, 自民黨: 政權黨の38年, (東京: 讀賣新聞社, 1995), pp. 241-243.

제시한 정치개혁법안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가이후 수상은 임시국회에서의 소신표명연설에서 '정치개혁의 실현'을 강조하며 선거제도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여 법안의 각의결정까지는 성공했지만 당내기반이 위약했기에 당내의 비주류로부터 공격대상이 되었다.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야당은 물론이고 YKK 등과 같이 당내로부터도 격렬한 반대에 부딛혔던 것이다.[61]

결국 1991년 9월 30일에는 오코노키(小此木彦三郎) 委員長이 폐안을 선언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가이후 수상이 '중대한 결의'까지 표명하며 개혁법안의 의지를 보였지만 중대결심을 국회해산으로 인식한 자민당 내의 인사들, 예를 들어 자신을 지지했던 오자와 이치로로부터도 반발을 받아 퇴진하게 되었다.[62]

이어서 출범한 것이 미야자와 내각이었다. 위의 〈표 10〉에서 보듯이 미야자와는 이케다파를 이은 전통있는 파벌이고 규모적으로도 작지 않으나 그의 당선이 〈표 12〉에서 보듯이 앞도적일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후보를 낼 수 없는 경세회의 지원에 의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미야자와 수상 역시 경세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표 12〉 1991년 10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자명	미야자와 (宮澤喜一)	와타나베 (渡邊美知雄)	미츠즈카 (三塚博)
득표수	285	120	87

* 출처: 일본 위키디피아(ja.m.wikipedia.org)의 '自由民主黨總裁選擧' 부분.

61) YKK는 야마사키(山崎; 와타나베파, 구 나카소네파), 고이즈미(小泉 ; 미츠즈카파, 구 후쿠다파), 가토(加藤 ; 미야자와파, 구 오히라파)의 머릿글자를 딴 것으로, 주류파였던 다케시다파, 즉 경세회에 의해 자민당이 좌지우지되는 것에 반대함.

62) 소위 말하는 '가이후 낙마시키기'(海部おろし)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北岡伸一, 自民黨: 政權黨の38年, (東京: 讀賣新聞社, 1995), pp. 2249-251.

가이후 내각에 이어서 1991년 11월 5일에 출범한 미야자와 내각은 1992년 2월에 발각되어 문제시된 '동경 사가와규빈'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동 사건으로 경세회의 실권자인 가네마루의 실각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가네마루의 의원직 사퇴가 자민당 내의 최대파벌인 경세회의 후계갈등을 가져왔고 그런 와중에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정책논쟁이 아닌 정쟁으로 번지게 되고 자민당의 실권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동경 사가와규빈'사건은 전후 일본정치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경세회는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다케시다파의 별칭이라고 하겠는데, 파벌영수인 다케시다가 수상직을 수행함에 따라 그 실질적인 운용 및 권력이 가네마루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다케시다가 사퇴했음에도 여전히 가네마루가 실권을 장악하자 다케시다와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이는 가네마루의 실권이후 그 후계를 둘러싸고 가네마루를 추종한 오자와와 다케시다를 추종하는 오부치 등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졌던 것이다.[63] 예를 들어, 가네마루가 사임하자 실권을 되찾은 다케시다는 오부치에게 파벌의 회장직을 넘겼는데, 오자와는 이에 불복하여 하타(羽田孜) 등과 함께 '개혁포럼 21'을 결성하고 오부치파, 즉 구다케시다파로부터 이탈했던 것이다.

반주류파가 된 하타.오자와 그룹은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정치개혁'을 주장하며 미야자와 내각과 오부치파를 '수구파'로 격렬히 공격하는데, 여기에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한 몫을 했다.[64] 가네마루는 1992년 10월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1993년 3월에는 탈세혐

63) 경세회의 후계갈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함: 久保紘之, 『田中角榮とその弟子たち: 日本權力構造の悲劇, (東京: 文藝春秋, 1995), pp. 369-379; 共同通信政治部, 『自民黨大亂: 權力者.最前線の攻防』, (東京: 共同通信, 1990), pp. 163-278.

64)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오자와 그룹에 대해서는 大嶽秀夫 編, 『政界再編の硏究: 新選擧制度による總選擧』, (東京: 有斐閣, 1997) 참조.

의로 체포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던 것이다. 이러한 여론의 요구에 대해 미야자와 수상은 5월의 한 방송프로그램('총리와 말한다')에 출연하여 다하라씨(田原総一朗)와의 인터뷰 중에 "정치개혁을 필히 실현한다"거나 "어떻게 해서든 이 국회에서 하겠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까지 언급했지만, 당내의 사정은 그러한 정치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당시 자민당 내부는 선거제도개혁과 관련하여 추진파와 신중파추진파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추진파의 논리는 대규모 정당에게 있어서 중선거구제가 정책상의 차이 없이 동일정당 내의 동료의원이 최대 라이벌이 되는 제도이기에 의원들로 하여금 이익유도(즉, 선거구의 이익단체와의 연계)에 의한 선거승리를 조장하는 시스템이기에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65] 달리 말하면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면 동료의원과의 투쟁이 일어나지 않고, 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하기에 특정이익 보다는 폭넓은 이익을 우선할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또한 정권교체가 용이하게 되므로 야당으로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단, 선거구에서 한 사람만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로의 이행에는 자민당 의원의 저항은 물론, 중의원 의석이 제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공명당이나 일본공산당 등이 격렬히 저항할 것이기에, '부활당선'에 의한 구제의 가능성과 소수정당에 일정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小選挙区比例代表並立制)를 제시했다.

하지만 사회당 등의 야당 3당은 자민당의 '소선거구제비례대표병립제'는 자민당의 단독 승리를 가져오기 위한 당리당략의 제도이라고 반발하면서, '획득표수와 의석수의 비례성을 높이는' '소선거구제비

65)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입장차이와 관련해서는 상기한 共同通信政治部와 大獄秀夫의 책들 외에도 일본 위키디피아(ja.m.wikipedia.org)의 '政治改革4法', '海部俊樹', '宮澤喜一'에 대한 부분들을 참조함.

례대표병용제'를 대안으로 제안했고, 공산당은 중선거제를 유지하면서 '1표의 격차' 해소를 위해 발본적인 정수시정을 실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야당의 반대와 함께 자민당 내에서도 중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인사들, 특히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젊은 의원들의 반대가 심했다.[66] 이에 더해 위에서 언급한 경세회 내의 갈등과 비주주류파의 저항도 있어서, 자민당이 결국 정리해 제시한 것은 선거제도신중파가 선호하는, 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수한 소선거구제를 제시하는 법안이었다.

동 법안은 당시의 '네지레국회'(ねじれ国会) 상황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것이어서, 여당의 소선거구제안과 야당의 병용제 법안은 여야간의 논쟁만을 불러일으킨 채 타결을 보지 못했다. 결국 미야자와 내각은 법안의 성립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따라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미야자와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자민당 내의 비주류파였던 하타·오자와 그룹은 야당이 제출한 불신임안에 동조하여 동 불신임안이 가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야자와 내각으로서는 선거제도개혁을 실현하지 못한채 중의원해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던 것이다.

3. 1993년 6월의 제40회 중의원 총선거

불신임안의 통과로 실시된 1993년 7월의 제40회 중의원 총선거는 통상 '거짓말하기' 선거로 칭해지는데,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제도개혁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미야자와 수상의 언급에서 비롯됐기 때문이었다.

66)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자민당 내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함: 大嶽秀夫 編, 『政界再編の研究』, (東京: 有斐閣, 1997); 小野耕二, 『日本政治の轉換點』, (東京: 青木書店, 1998).

〈표 13〉 제41회 중의원 총선거 결과, 1993년 6월

정당	의석수(의석율)		득표수(득표율)
	1993년/제40회	1990년/제39회	
자유민주당	223(43.64%)	275(46.11%)	22,999,643(36.62%)
일본사회당	70(13.70)	136(24.39)	9,687,588(15.43)
신생당	55(10.76)	-	6,341,364(10.10)
공명당	51(9.98)	45(7.98)	5,114,351(8.14)
일본신당	35(6.86)	-	5,053,981(8.05)
민사당	15(2.94)	14(4.84)	2,206,682(3.51)
신당사키가케	13(2.54)	-	1,658,097(2.64)
사회민주연합	4(0.78)	4(0.86)	461,169(0.73)
일본공산당	15(2.94)	16(7.96)	4,834,587(7.70)
무소속	30(5.87)	21(7.32)	4,304,188(6.85)
총계	511	512	62,804.144

출처: 일본 위키디피아(ja.m.wikipedia.org)의 '衆議院議員總選擧の一覽' 부분에서 第39回와 第40回 衆議院議員總選擧.

제40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표 13〉에서 보듯이 223석을 얻는 결과를 기록했다. 이는 일견 자민당의 대참패로 여겨질 수 있는 수치이다. 특히 가이후 수상 하에서 진행된 제39회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275석을 획득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수치상으로는 대참패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민당으로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자민당에서 갈라선 신생당(55석)과 신당사키가케(13석)의 획득의석수를 결합하면 1989년의 성과를 초과한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자민당이 불신임안의 통과에 의해 갑자기 실시된 선거라는 측면에서 신생당이나 신당사키가케로 이적한 전직 의원들의 공간을 메꾸는 후보자(자객후보)의 옹립을 때맞춰 이루어지지 못해서 공시전의 의석을 유지하는데 그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영향은 결국 단독과반수 획득 및 정권유지의 실패였고, 1955년 이후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동 선거에서의 승자는 역시 1992년의 제16회 참의원통상선거에서 의석을 획득한 일본신당과 선거직전에 자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신생당이나 신당사키가케라고 하겠다. '신당붐'을 일으킨 때문이라고 하겠는데, 예를 들어 일본사회당은 '신당붐'에 매몰되는 형태로 55년체제 이후로는 최소의석수를 기록했던 것이다. 일본공산당도 의석수 감소를 겪었고, 다른 정당들은 현상유지 또는 의석수의 미증에 그쳤다. 자민당과 하마께 일본사회당도 의석수가 대폭 감소됐다는 것은 자민당의 정권유지 실패가능성과 더불어 소위 말하는 '55년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사회당, 신생당, 공명당, 민사당, 사회민주연합의 5개 정당은 선거 전부터 연립협의를 시작했는데, 합계 195의석으로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했다. 자민당도 223석으로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했는데, 이에 따라 일본신당과 신당사키가케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었다. 쌍방과의 교섭 결과 일본신당과 신당사키가케의 양당은 '비자민세력'을 형성하고 민주개혁연합을 포함하는 8개당파에 의한 연립정권수립이라는 합의였다. 이로써 55년체제는 붕괴되고, 일본신당의 대표인 호소카와를 수반으로 하는 호소카와내각이 성립됐다.

'리쿠르트'사건이라는 정치스캔들로부터 시작된 자민당의 위기는 자민당으로 하여금 종전과 같이 가이후 수상의 옹립이라는 방안으로 대응하는데 일단 성공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개혁에는 실패함으로 해서 결국 정권유지의 실패라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선거제도의 개혁이 파벌역학에 의해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은 파벌 및 그 역학이 자민당의 힘이면서도 단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안보투쟁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자민당은 이케다 수상이라는 선택과 그에 의한 '소득배증'정책의 실현이라는 현실주의적 대응책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케다라는 선택이 안보투쟁에 의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시도가 아니라 파벌역학에 의한 것이고, 1960년의 제29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이길 수 있었던 '소득배증' 정책 또한 선거에 승리하고자 하는 이케다 수상의 현실주의적 대응이었다는 점이 다양한 리더를 품을 수 있는 파벌의 존재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3년의 제40회 중의원 총선거 결과는 파벌역학의 단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파벌간의 합의가 여의치 않을 때는 결국 분열을 가져올 수 있고, 그에 따라 정권획득도 실패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파벌갈등의 심화는 '다나카 금맥문제'나 '동경 사가와규빈' 문제를 리더십의 교체로 극복하고자 하는 자민당의 유연성이라는 힘을 상쇄시킨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점이라고 하겠다.

제4장

야당으로의 전락과 '自社さ' 連立政權의 성립

본 장에서는 1996년 10월의 제41회 중의원 총선거를 중심으로 야당으로의 전락이라는 위기를 55년체제 하에서는 오랜 앙숙이었던 사회당과의 연립정권 형성이라는 전략으로 정권복귀에 성공한 자민당의 대응이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검토한다. 신당사키가케의 다케무라 의원을 중개자로 형성된 '자사사'(自社さ) 연립정권 전략은 자민당의 정권 참여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도 성공이었지만, 사회당의 무라야마(村山富市) 내각에서 결국 자민당의 하시모토 내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재집권전략으로서는 성공적이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자민당의 위기대응 전략이 국민 및 유권자에게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1. 위기상황: 야당으로서의 자민당

1993년 6월 18일, 사회당, 공명당, 민사당, 그리고 사회민주연합은 미야자와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던 불신임안의 통과였다.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비록 당내 갈등이 있었다고는 해도 자기 당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수상에 대한 불심임안에 자민당 내에서 동조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67] 물론 이러한 조반표의 발생과 같은 일이 처음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제1장에서 검토한 안보투쟁의 경우 기시 수상의 조약갱신 강행에 반대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이러한 조반표적인 행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 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오부치파의 지지를 받는 미야자와 수상 및 내각을 밀어내고자

[67] 渡邊昭夫 編, 『戦後日本の宰相たち』, (東京: 中央公論社, 1995), pp. 421-425.

하는 오자와를 중심으로 하는 하타파의 인물들, 즉 오자와와 하타를 포함해 오쿠다(奥田敬和), 이시이(石井一), 후지이(藤井裕久), 쿠마타니(熊谷弘) 등의 자민당 의원 39명이 찬성하여 불신임안이 255 대 220으로 가결되었던 것이다.[68]

미야자와 수상이 불신임안의 가결에 맞서서 일본국헌법 제7조 제3호에 의해 중의원을 해산함에 따라 제40회 중의원의원총선거가 1993년 7월에 실행되었다.[69] 정국이 선거국면으로 전환되자 그동안 선거제도개혁을 추진하며 정치개혁을 주창했던 그룹들이 자민당을 탈당하며 신당붐을 일으켰다. 예를 들어 '유토피아정치연구회'에 참가했던 다케무라(武村正義), 하토야마(鳩山由紀夫), 그리고 다나카(田中秀征) 등이 1993년 6월 21일에 자민당을 이탈하여 정치개혁 등을 주장하며 '신당사키가케'(新党さきがけ)를 결당했다. 이틀 후인 1993년 6월 23일에는 하타와 오자와 등이 '정계재편' 및 '정치개혁'을 주장하며 오자와를 대표간사로 하는 '신생당'(新生党)을 결성했다.

일본신당의 호소카와(細川護熙)도 후보자를 옹립하며, 신생당의 오자와와 신당사키가케의 다케무라에게 동조해 '신당붐'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러한 와중에 "자민당은 나쁘다", "정권교체를" 등과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었다. 관방장관이었던 고노(河野洋平)는 탈당움직임과 신당붐에 대해 한 정례기자회견에서 "정치불신을 불러온 것은 이탈한 사람들이지 않는가"라고 격렬하게 비판했지만 총선거에서 신당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자민당은 과반수 획득에 실패했다.[70]

자민당이 비록 공시전의 의석을 유지하는 중의원의 최대세력이었지만 정국의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던 일본신당과 신당사키가케가 비

[68] 小野耕二, 1998, pp. 177-8.
[69] 渡邊昭夫 編, 1995, p. 424.
[70] 1993년의 제41회 중의원 총선거 양상에 대해서는 일본 위키디피아(ja.m.wikipedia.org)의 '衆議院議員總選擧の一覽' 부분에서 第40回 衆議院議員總選擧를 참조함.

자민연립의 방향에 합의함에 따라 결당이래 처음으로 야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미야자와 내각은 총사직하고, 그 자리를 8개의 정당 및 회파가 연립하여 성립된 호소카와내각이 출범하게 되었다. '동경사가와규빈'사건이라는 자민당의 위기가 1955년의 하토야마 내각 이후 38년간 지속되었던 55년체제의 막을 내리고 연립정권이라는 새로운 체제와 시대의 막을 열었던 것이다.

야당으로 전락한 자민당은 우선 새로운 총재로 미야자와 내각에서 관방장관을 지냈던 고노(河野洋一)를 선출했다. 원래는 다른 의원들로부터 신망이 높고 그로 해서 정치개혁위원회의 회장직을 수행했던 관료출신의 고토다(後藤田正晴)를 총재로 추대하고자 했으나 그가 고사하는 바람에 고노가 입후보해 당선되었던 것이다.[71] 총재에 당선된 고노는 당3역의 인선과 관련해 총재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미츠즈카파의 모리를 간사장으로, 오부치파의 하시모토를 정조회장으로, 그리고 와타나베파의 기베(木部佳昭)를 총무회장으로 임명했다.

야당으로 전락했음에도 여전히 파벌중심의 인사가 진행됨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하시모토의 인선에는 파벌구도를 떠난 정책 및 능력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야당으로서 여당과 경쟁하는데 있어서는 정책을 총괄하는 정조회장의 인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조언에 따라 하시모토를 선택했던 것이다.[72] 기베의 인선에 있어서는 와타나베와의 정책적 차이를 고려해 신중했지만 부친인 '고노 이치로'(河野一郎)의 비서였던 점등이 고려된 인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73]

---

71) 고토다의 거부의사와 관련해서는 後藤田正晴, 『情と理: 後藤田正晴回顧錄 下』, (東京: 講談社, 1998).

72) 이 조언은 노회한 정치가로 알려진 마쓰노 라이조(松野頼三)에 의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대해서는 ja.m.wikipedia.org의 河野洋一(고노요헤이)과 松野頼三과 관련된 부분을 참조바람.

73) 고노 요헤이는 아버지 이치로를 따라 원래 고노파를 계승한 나카소네파(후의 와타나베파) 소속이었지만 탈당해 신자유클럽을 형성하고 복당한 이후에는 나카소네파가 아닌 미야자와파를 선택함. 나카소네파의 보수적 색채 보다는 미야자와파가 더 적합하다는

정책적으로 고노 총재가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작금의 상황을 가져온 선거개혁법안 등의 처리였다. 호소카와(細川護熙) 내각에 있어서도 정치개혁법안의 처리를 우선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해서, 호소카와 수상은 당초 연내에 법안이 성립되지 않으면 총리를 사직하겠다고 할 정도로 열정을 기울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를 넘겨 1994년에야 가능하게 됐는데, 이러한 과정에는 무엇보다도 대정당인 자민당과 다양한 소정당이 모인 연립정권 사이에 입장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조직력이나 자금력에 있어서 우월한 대정당일수록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내는 소선거구제가 유리한 한편, 작은 정당에게 있어서는 의석수를 득표수에 따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가 의석확보에 유리하여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또한 같은 비례대표제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비례대표구로 정할지, 예를 들어 전국을 한 단위로 할지 또는 행정단위별로 좀 더 구분할지 등에 따라서 대정당과 소정당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다고 할 때 유권자의 투표권을 하나로 할지, 즉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에서의 투표를 연계할지 또는 별도로 할지에 대해서도 대정당과 소정당은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후원회 등과 같은 연고주의적인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있는 대정당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에서 강하기 때문에 소선거구에서의 득표수가 그대로 비례대표에 반영되는 1표제를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소정당들은 반대로 연계를 차단하여 별도로 투표하게 하는 2표제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소정당들이 2표제를 선호한 이유는 연고주의가 강하게 발휘될 수 있는 소선거구와는 달리, 비례대표구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또는 소선거구에 대한 견제적인 투표가 가능

이유에서 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기한 ja.m.wikipedia.org의 河野洋一를 참조바람.

해질 것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표 14〉 선거제도 개혁안의 비교

	연립여당안	자민당안
소선거구	250석	300석
비례대표	전국구, 250석	도도부현 블록, 177석
그 외	2표제	1표제*

* : 소선거구 후보자에게 투표된 표에 한하여; 투표된 후보자의 소속정당이 비례대표구에 입후보한 경우는 동시에 비례대표구에 소속정당에도 투표된 것으로 보는 제도.

상기한 쟁점들과 그에 대한 연립여당과 자민당의 입장 차이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 〈표 14〉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연립여당 안에서는 소정당에 유리한 비례대표의 의석수가 소선거구 의석수와 동수인 반면에, 자민당 안에서는 대정당에 유리한 소선거구 의석수가 훨씬 많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호소카와 내각은 이러한 자민당의 입장을 고려해 의석수 조정과 다양한 안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했다. 즉, 총정수 500의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를 도입하고, 소선거구 274의석과 전국구의 비례대표 226의석으로 하며, 투표방식으로는 자서식을 폐지하고 기호식 2표제하며,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연좌제를 강화하며, 총리부에 선거구획정심의회를 두고 위원 7인의 임명후 6개월 내에 선거구분할에 해새 결론을 내도록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74]

74) 이 외에도 〈기업.단체헌금은 정치가 개인을 위해서는 금지하고, 정당 자금관리 단체를 위해서는 인정하지만 5년 후에는 개정하며, 공개기준은 '정당·자금관리단체, 정치단체 공히 5만 엔을 초과시, 정치자금 파티의 큰구좌 구입자는 20만 엔 초과시, 정당교부금은 1건당 5만 엔 이상으로 하고, 국민1인당 250엔, 총액 309억 엔을 국회의원 5인 이상 또는 최근의 중의원 총선거 및 참의원통상선거의 선거구 및 비례대표의 어느 쪽이든 득표율이 3% 이상의 정당에게 조성하며, 총액의 반을 정당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는 각 당의 지난 중의원 총선거와 지난 번 및 지지난 번의 참의원 통상선거의 선거구선거 및 비례대표선거에서 각기 득표수비율에 대응해 배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정치개혁4법안의 심의과정에 대해서는 ja.m.wikipedia.or

연립정권의 이러한 안에 대해서 사회당의 경우 소선거구의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구의 정수를 줄이는 수정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지만, 11월 18일의 중의원에서 연립여당안이 가결(찬성 270, 반대226)되고 자민당안은 부결(찬성225, 반대28)되었다. 당초의 공약대로 연내에는 성립되지 못하고 참의원을 거치기 위해 해를 넘겨야 했다. 참의원의 표결과 관련해 사회당의 무라야마(村山富市) 위원장을 위시한 집행부는 반대의원에 대한 설득공작을 시도했지만 1994년 1월의 참의원 표결에서는 결국 사회당으로부터 17인, 민사당 등으로부터 1인의 반대의원들이 나타나 부결되었고 이에 따라 심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결과가 달라지게 됨에 따라 양원협의회에 올리게 되었다.

조반표는 참의원에서의 사회당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자민당으로부터 법안에 찬성하는 조반의원이 13인이나 나타났고,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법안에 찬성하는 조반이 5인이 나타났다. 또한 참의원 본회의에 앞서서 개최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가결동수가 되는 것을 자민당 위원이었던 호시노(星野朋市)가 조반해서 가결되는 일도 있었던 것인데, 이처럼 다가올 중의원 재의결에서도 다수의 조반이 양당에서 공히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연립여당 출신의 도이다카고(土井たか子) 중의원의장과 자민당 출신의 하라부미(原文兵衛) 참의원의장은 호소가와 수상과 고노 자민당 총재의 회담을 중재하여 1월 29일에 최종적인 안이 제출되는데 성공했다.[75] 이에 대한 사회당 내의 불만은 존재했지만, 사회당집행부로서

g의 '정치개혁4법'에 대한 부분을 참조바람.

[75] 최종안의 내용은 "① 소선거구 300, 비례대표(지역블록) 200, ② 기업등 단체기부는 지방의원 및 수장을 포함한 정치가의 자금관리단체에 대해서 연간 50만 엔을 한도로 인정하며, ③ 호별방문금지유지, ④ 정당요건 3%는 2%로 변경, ⑤ 각 정당에 대한 정당조성의 상한선은 '전년도 수지실적의 40%로 하지만 합리적인 구성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⑥ 투표방법은 기호식의 2표제로 하고, ⑦ 기부금지를 위한 경조전보 등의 취급은 현행대로, ⑧ 중의원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3자 기관은 총리부에 설치하고, ⑨ 이상의 합의의 법제화를 위해 중참 양원으로부터 연립여당 및 자민당 각 6명(합계 12명)의

는 자신의 당에서 나온 조반자로 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같은 날 합의안은 양원협의회에서 가결되고 이어서 중참 양원을 통과해 성립됐다.

정치개혁법안의 성립 후에도 호소카와 연립내각은 소비세 인상이나 오자와 또는 소위 말하는 '이치-이치'(一.一) 라인의 고압적 운용자세로 인해 진통을 겪었는데, 결국 1994년 4월 25일에는 8개당파연립인 호소카와 내각은 무너지게 됐다.[76] 이에 따라 신생당의 하타총재가 이끄는 소수내각이 성립되었다. 신생당과의 관계가 나빴던 일본사회당이 연립에서 이탈하고 신당사키가케도 각외협력으로 정권과의 거리를 두었기 때문이었다. 하타내각은 결국 사실상의 예산관리내각이었고, 새로운 정계개편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었다.

2. 대응으로서의 '自社さ'연립정권 구상과 하시모토 내각의 성립

(1) '자사사'(自社さ) 連立政權구상

오랜 숙적이었던 자유민주당과 일본사회당(1996년 1월 19일부터는 사회민주당)이 함께 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은 이전의 55년체제에서는 물론, 93년 이후의 연립정권 시대에 있어서도 생각하기 쉬운 것이 아니었다.[77] 이는 그만큼 자민당으로서는 정권의 재탈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하겠는데, 이에 대한 증언은 다수 제시된다. 예를 들어, 자민당의 파벌영수를 지낸 가메이(亀井静香)는 "자사사정권은 최대야당이었던 자민

위원에 의한 협의(정치개혁협의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상기한 ja.m.wikipedia.org의 '정치개혁4법'에 대한 부분을 참조바람.

76) '이치.이치'(一.一) 라인이란 오자와 이치로의 이치와 공명당 이치카와(市川) 의원의 이치에서 따온 것임.

77) '자사사' 연립정권의 형성배경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함: https://ja.wikipedia.org/wiki/의 '自社さ連立政權'; 久保亘, 『連立政權の眞實』, (東京: 讀賣新聞社, 1998).

당이 연립을 이탈한 사회당과 함께 하는 울트라C를 생각한 결과이다. 자민당이 정권복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는 집념에서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이 정권은 무라야마 수상 이외에는 탄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78]

자민당의 또 다른 의원들인 이시하라(石原慎太郎)와 나카오(中尾栄一)도 무라야마 수상의 실현을 본인들이 움직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일본경제신문의 한 인사는 "이시하라와 나카오는 자민당의 세이란카이(青嵐会)에 속한 매파로 알려진 인물이다. 사회당 좌파의 무라야마와는 사상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다. 자민당은 좌에서 우까지 상관하지 않고 정권에 복귀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다"라고 말했다.[79] 노나카(野中廣務)에 의하면 무라야마를 수상으로 설득한 것은 사노족(社労族)으로 20년을 넘게 일하며 안면을 가진 토이다(戸井田三郎)였다고 한다.

이러한 언급들을 종합하면 호소카와 내각의 운용에 있어서 실권을 장악한 '이치.이치'라인에 반발한 사회당과 사키가케의 '사사정권구상'에 자민당이 보태진 형태에서 '자사사공동정권구상'이 제작된 것이라고 하겠는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자민당의 오랜 실세인 다케시다 노부로(竹下登)의 주도 및 그림자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자민당과 사회당이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자사사연립구상은 55년체제의 종언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민당은 사회당의 8개당파연립정권 이탈직후부터 전 간사장이었던 가지야마(梶山静六)를 중심으로 한 '참모본부' 하에서 사토(佐藤孝行), 노나카(野中広務), 가메이(亀井静香), 요사노(与謝野馨), 시라카와(白川勝彦) 등이 수면하에서 사회당공작을 개시했다.[80] 또한 자민

78) 상기한 ja.m.wikipedia.org의 '정치개혁4법'에 대한 부분을 참조.
79) 상기한 ja.m.wikipedia.org의 '정치개혁4법'에 대한 부분을 참조.
80) 일본 위키디피아(https://ja.wikipedia.org/wiki/) 의 '自社さ連立政権' 부분 외에 다

당은 자사연립정권수립후의 정권운영을 상정하여 '무라야마 수상'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자사 유지에 의한 연구회(勉強会)를 열고, '리버럴 정권을 만드는 회의'(「リベラル政権を創る会」)와 헌법문제연구회(「憲法問題研究会」)라는 두 개의 그룹을 만들었다. 여기서의 정책연구가 수반지명선거에 있어서 무라야마 수상표가 되었다.

'리버럴정권을 만드는 회의'에는 자민당에서 아이자와(逢沢一郎), 아베(安倍晋三), 에도(衛藤晟一), 오카와(小川元), 가와사키(川崎二郎), 기시다(岸田文雄), 쿠마시로(熊代昭彦), 사리카와(白川勝彦), 후타다(二田孝治), 무라카미(村上誠一郎), 야츠(谷津義男)가 참석했고, 사회당에서는 가네다(金田誠一), 나카오(中尾則幸), 이토(伊東秀子)가, 호헌리버럴회의에서는 이토우 마사토시(翫正敏), 니시노(西野康雄), 구니히로(国弘正雄), 덴 히데오(田英夫), 미쓰이시(三石久江)가, 이원클럽(二院クラブ)에서는 아오지마(青島幸男), 시모무라(下村泰)가, 무소속에서는 키히라 데히코(紀平悌子)가 참석했다. 헌법문제연구회에는 자민당에서 이시하라(石原慎太郎), 마쓰오카(松岡利勝)가, 사회당에서는 기타자와(北沢清功), 아키바 타다도시(秋葉忠利)가 참가했다.

1994년 6월 23일, 자민당이 하타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신당사키가케의 다케무라가 무라야마 수반을 제안했다. 이에 맞서 오자와는 선거당일인 6월 29일에 본회의 한 시간 전에 가이후 수반을 표명했다. 오자와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자민당으로부터 대량의 이탈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 호소카와는 "이것으로 100% 이긴다"고 코멘트했고, 가이후의 재등판을 추구한 자민당의 쓰지마(津島雄二)도 "(자민당 조반자가) 40표는 확실하다"고 오자에게 약속했지만, 제1회 투표에서의 자민당조반자는 26인, 제2회 투표에서는 19인에 그쳤다. 또한

음을 참조함: 久保亘, 『連立政権の眞實』, (東京: 讀賣新聞社, 1998), pp. 81-98; 後藤田正晴, 『情と理: 後藤田正晴回顧錄 下』, (東京: 講談社, 1998), pp. 294-308.

사회당에서 반자민·구연립합류의 기치를 올렸던 당내파벌, 데모크라시로부터의 조반자도 얼마되지 않아 자치로(自治労)가 무라야마 옹립에 나선 것에 의해 데모크라시의 결속은 무너졌다.

같은 해 6월 30일에 하타 내각의 총사직에 동반되어 사회당위원장의 무라야마(村山富市)가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하고 무라야마 내각이 발족했다. 무라야마는 자민당총재 고노(河野洋平)와 다케무라를 불러서 "두 분에게 전면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 중요한 것은 외상과 장상이다. 두 분이 둘 중의 하나를 맡아주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고노는 미야자와(宮澤喜一)를 찾아가 상담했는데, 미야자와는 놀라워 하면서 "의문을 달 것도 없이 외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답하면서 그 이유로서 일본은 역시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없으면 진전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는 사회당정권이 아니니까 "외교의 책임은 자민당총재인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해야 합니다"라고 답했다. 다케무라도 외상을 희망했지만 무라야마는 다케무라를 내치를 담당하는 장상으로 하고, 고노를 외환과 연관된 외상(부총리겸 임)으로 임명했다.

이로서 자민당의 '자사사' 연립내각 구상은 완성됐다고 할 수 있었는데, 이에 따른 추진된 '자사사' 연립내각의 정책강령은 다음과 같았다. ① 현 헌법을 존중하고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의 실시를 명언하고, ② 세제개혁으로는 그 전제로서 행정개혁의 단행을 하고 (사키가케의 주장), 조건부로 소비세의 인상방향을 인정하며, ③ 외교방위에서는 자위대와 미일안보조약을 유지하고,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후에 무라야마 수상은 자위대합헌, 안보견지로 정책전환 한다), ④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에의 진입은 '신중대처'하며, ⑤ 무라야마는 소신표명연설에서 자위대를 인정하고, 안보반대가 당시인 사회당의 당수로서 "당대회에서 안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총리를 그만 두겠다"고 당시를 버릴 각오를 보였다.

(2) 하시모토 총재 및 내각의 성립[81]

아래의 〈표 15〉에서 보듯이, 1995년 9월 23일에 실시된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하시모토(橋本龍太郎, 하시모토 류타로) 통산상이 고이주미(小泉純一郎, 고이주미 준이치로) 전우정상을 꺾고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었다. 하시모토 후보의 총 득표수는 304표였는데, 이 중에서 의원표가 239, 당원(또는 당우)표가 65였다. 반면에 고이주미 후보는 의원표 72와 당원표 15를 얻어, 총 87표를 획득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표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의 총재선거는 하시모토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표 15〉 하시모토(교본) 총재 당선 시, 1995.9.22.

	득표수	의원표	당원표
하시모토	304	239	65
고이즈미	87	72	15
파벌명	파벌인원수	하시모토 추천인	고이즈미 추천인
구 오부치	59	와타누키 등 3명	-
구 미츠즈카	68	나카야마 등 5명	이시바시 등 25명
구 미야자와	67	시라카와 등 7명	아소 등 4명
구 와타나베	55	나카오 등 7명	-
구 고모토	23	후지모토 등 5명	-
기타	40	호리 등 3명	하세(馳浩) 1명
계		30	30

* : 선출방식은 임시 당대회를 통해 당원표와 중참원 국회의원표를 집계하는 것으로, 당원표는 1만인을 국회의원 1표와 등가로 처리함.
* : 하단은 입후보자의 추천인 명단의 파벌적 구성을 나타냄. 출처는 요미우리 신문, 1995. 9. 12.
* : 『政官要覽: 速報版』, (東京: 政策時報社, 1995. 8.), pp. 230-231, 236-237.

81) 본 절의 자민당 총재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면우, "1995년의 일본정치/ 연속성과 변화; 자민당과 신진당 총재선거를 중심으로," in 세종연구소 편, 『주변4강 1995년』, (성남: 세종연구소, 1996), pp. 95-141를 참조함.

이번의 총재선거는 처음에는 하시모토 통산상과 고노 총재 사이의 2파전이 예상됐었고, 이는 적어도 고노 총재가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을 하기까지는 그러했다. 하시모토는 일찌감치 총재선거에 출마할 것을 표명했는데, 고노도 비록 출마선언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이 있기까지는 양자의 경합이 진행되고 있었다. 불출마 선언이 있었던 날은 그의 출마선언이 예정된 날이기도 했다. 고노가 사퇴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고노 자신은 자신이 출마함으로 해서 야기될 수 있는 당내 내분 및 혼란을 막고자 후보사퇴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문들은 고노의 자체 설명을 언급은 하면서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고노 진영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에 따라 승산이 없는 것을 알고 결국 도중하차한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자민당의 총재선거 방식은 이제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일반 당원의 일만 표를 의원의 한 표와 같은 것으로 계산했다. 따라서 80만 명에 달하는 당원이 선거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민당이 150만 명의 당원을 내세우는 것을 기초해 보면 이는 55%를 약간 상회하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82] 우선 하시모토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민당 내의 세력은 어떻게 분포됐으며, 그리고 그가 어떠한 개인적 퍼스날리티를 가진 사람인가에 대해서 점검해본다.

우선 총재선거에 참여한 양 후보에게 던져진 표를 간단히 분석해 보면, 고이주미 후보에게 간 의원표의 대부분은 고이주미 후보가 속해 있는 舊미추주카(三塚)파에서 나온 반면에, 하시모토 후보에의 의원표는 파벌을 횡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총재선거전의 당내 세력분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즉, 고이주미 후보가 획득한 의

82) 자민당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투표율은 55.23%이었다.

원표 72개는 그가 속한 구미추주카파의 소속의원수인 68명과 거의 비슷하며, 하시모토 후보의 득표는 이를 제외한 수치와 비슷하다는 것이다.[83]

물론 구미추주카파에 속해있는 68명의 의원이 모두 고이주미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72표는 구미추주카파에서 약 50정도, 구미야자와(宮澤)파에서 10정도, 그리고 그외의 동조표가 12정도로 구성됐으리라고 추정된다.[84] 이러한 추정에는 하시모토를 추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구미추주카파 소속의 의원들이 포함됐다는 점과 애초에 하시모토와 경합하리라고 예상됐던 고노 전총재의 지지세력(구미야자와파 소속)들이 고이주미에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등이 고려돼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보면, 하시모토 후보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이주미 후보에게도 한 파벌의 지지만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애초에 100표 이상을 얻으면 승리한 것과 같다고 공언한 고이주미 진영에게 있어서 87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이주미 후보의 부진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투표의 구성상 고이주미 후보는 당원표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더욱 부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이주미 후보가 이전부터 주장해온 우정사업의 개혁안을 이번의 총재선거에서도 제기했고, 이것이 자민당의 주요 지지단체인 우정사업 관련 압력단체, 즉 전국우체국장연합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된다.

다른 하나는 고이주미 후보의 출마가 늦었다는 점이다. 고노 총재가 불출마함에 따라 당내에서는 고노 총재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 그와 동

83) 〈표 15〉는 자민당 총재선거가 실시되기 전인 8월의 상황을 나타냄으로, 총재선거에서 나타난 총의원표인 312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한 총재선거에서는 기권표가 하나 나왔다.

84) 『朝日新聞』, 1995. 9. 23.

시에 총재선거가 경합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맨 처음에는 모리 간사장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결국 같은 파벌에 속해있는 고이주미 의원이 출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 다른 하나는 역시 하시모토 후보의 국민적 인기도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비록 우정관계의 이익집단들이 고이주미 후보를 기피하는 측면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표(의원표와 당원표 모두)의 획득에 있어서 양 후보 사이에 나타난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하시모토 후보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여·야당의 여러 의원들 중에서도 차기 수상 후보감으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무라야마 수상이후의 수상후보로서 적격인 정치가를 묻는 지난 95년 6월의 조사에서 하시모토는 23.4%를 차지했는데, 이는 2위인 가이후 전수상의 11.8%보다 단연 우세한 것이었다.[85] 따라서 다가올 중의원 총선거를 앞에 둔 의원들이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는 인물을 당의 얼굴로 내세워 선거에 임하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3. 1996년 10월 20일의 제41회 중의원 총선거

하시모토 총재의 선출과 그에 따른 하시모토 내각의 출범이후 1996년 10월 20일에 실시된 제41회 중의원 총선거에서는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민당과 공산당이 기존의 의석수를 증가시킨 성과를 올린 반면에, 신진당이나 사민당, 그리고 신당사키가케는 기존의 의석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고, 민주당도 기존의 의석수를 유지하는데 그쳤다. 즉 자민당은 기존의 211석에서 28석이나 증가된 239석을, 공산당은 기존의 15석에서 11석을 증가시킨 26석을 획득했지만, 신진당은 기존의 160석에서 4석 모자라는 156석을 차지하는데 그쳤

85) 『日本經濟新聞』, 1995, 6. 20., p. 3.

던 것이다. 사민당과 신당사키가케의 결과는 신진당보다 더욱 저조하여, 각기 기존의 30석과 9석에 훨씬 못 미치는 15석과 2석만을 차지했다. 새롭게 창립된 민주당도 신당붐을 일으키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기존의 52석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쳤다.

〈표 16〉 제41회 중의원 총선거 결과

정당명	소선거구		비례대표		총의석수
	득표수/ 득표율	의석/ 의석율	득표수/ 득표율	의석/ 의석율	의석/ 의석율
자유민주당	21,836,096/38.63%	169/ 56.3%	18,205,955/ 32.76%	70/ 35.0%	239/ 47.8%
사회민주당	1,240,649/ 2.19%	4/ 1.3%	3,547,240/ 6.38%	11/ 5.5%	15/ 3.0%
신당 사키가케	727,644/ 1.29%	2/ 0.7%	582,096/ 1.05%	0/ 0.0%	2/ 0.4%
소계	23,804,389/ 42.11%	175/ 58.3%	22,335,288/40.19%	81/ 40.5%	256/ 51.2%
신진당	15,812,326/ 27.97%	98/ 32.0%	15,580,053/ 28.04%	60/ 30.0%	156/ 31.2%
민주당	6,001,666/ 10.62%	17/ 5.7%	8,949,190/ 16.10%	35/ 17.5%	52/ 10.4%
일본공산당	7,096,766/ 12.55%	2/ 0.7%	7,266,743/ 13.08%	24/ 12.0%	26/ 5.2%
민주개혁 연합	149,357/ 0.26%	1/ 0.3%	18,844/ 0.03%	0/ 0.0%	1/ 0.2%
제파	1,155,108/ 2.04%	0/ 0.0%	1,417,077/ 2.55%	0/ 0.0%	0/ 0.0%
무소속	2,506,810/ 4.44%	9/ 3.0%	-	-	9/ 1.87%
소계	32,724,033/ 57.89%	125/ 41.7%	33,233,907/ 59.81%	119/ 59.5%	244/ 48.8%
합계	56,528,422/ 100.0%	300/ 100.0%	55,569,195/ 100.0%	200/ 100.0%	500/ 100.0%

* : 선거전의 의원정수는 511의석(중선거구제)이었지만, '소선거구 300의석, 비례대표구 200의석이 되어 11의석이 감소했다.

** : 선거전에 4인이었던 제파의 의원은 자유연합 2인, 신사회당 2인이었는데, 양당은 공히 입후보자 전원이 낙선함.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 볼 때, 동 선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냈다.[86] 첫째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중의원 총선거에서의 투표율은 다소의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60년대 이후 지속적인 하강세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지만, 59.65%라는 투표율은 그러한 중에서도 최저의 수치라고 하겠다.[87] 그러나 이러한 낮은 투표율은 95년의 통일지방선거와 참의원선거에서 각기 55.12%와 44.51%라는 낮은 투표율이 나타났다는 것에서도 예상됐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이러한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선전했다는 점이다. 소위 말하는 55년체제하에서는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 조직표에 기반을 둔 사민당이나 공산당에 유리하고 자민당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이번의 선거에서는 자민당보다는 창가학회나 구(旧)동맹계 노조와 같은 조직표에 기반을 둔 신진당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신진당의 조직표라는 것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에는 59.65%라는 수치가 결코 낮은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조직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1995년 말에 있었던 종교단체법안의 개정에서 나타나듯이 창가학회에 대한 자민당의 비난과 위협이나 민주당이라는 신당의 등장이 조직표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라는 신제도의 실행에 따라 자민당 의원들의 선거구가 조정되었는데, 이들의 후원회들이 그대로 분산된 것이 아니라 협조하여 조직표이상의 효과를 가져온 것일 수도 있다.

---

86) 동 선거에 대한 분석도 상기한 이면우, "1995년의 일본정치/ 연속성과 변화; 자민당과 신진당 총재선거를 중심으로" 를 참조함.

87) 투표율의 추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각 신문이 공히 선거결과를 보도하는 가운데 나타난다. 이를 간략히 정리한 것으로는 이면우, "제9장: 일본의 정치", 서울대 국제지역원 편, 『아시아·태평양, 1997』, p. 239의 〈표 3〉을 참조 바람.

후원회간의 협조이외에도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농촌표가 이번 선거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민당이 다른 정당들과 비교해 볼 때 대도시보다는 그 외의 지역에서 더 많은 의석을 획득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88] 이는 또한 자민당이 농촌에서 획득한 득표율은 95년의 참의원선거보다 이번 선거에서 더 높아졌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가능성은 모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빙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통계에 의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그 가능성만을 소개하는 것에 그친다.

셋째로는 투표자들의 분산투표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는 자민당의 득표율이 소선거구와 비례대표구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데, 소선거구에서 38.6%의 득표율을 획득한 자민당은 비례대표구에서는 32.8%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89] 반면에 신진당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구에서 공히 28.0%의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주당이나 공산당, 그리고 사민당은 소선거구에서 보다는 비례대표구에서 더 많은 득표율을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투표는 자민당지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동경을 대상으로 한 출구조사의 결과를 보면, 소선거구나 비례대표구에서 공히 동일정당에 투표한 것은 신진당의 경우에 가장 높기는 하지만 민주당보다는 자민당의 경우가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90] 이는 다시 말하면 자민당이나 민주당, 그리고 공산당의 선전이 다른 당에서의 분산표를 흡수한 것에서 가능했던 반면에, 신진당의 불만족스런 결과는 이러한 분산표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 한데서도 비롯된다는 것임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88) 『朝日新聞』, 1996년 10월 22일자, p. 10.
89) 『日本經濟新聞』, 1996년 10월 22일.
90) 『朝日新聞』, 1996년 10월 21일, p. 4.

마지막으로는 붕괴에 가까운 성적을 낸 사민당과 신당사키가케의 선거결과를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다. 이는 무엇보다도 선거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창당된 민주당에 의해 빚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이들 두 정당에 속한 많은 의원들이 선거전에 민주당으로 이탈해 나가서 선거 중에는 이미 큰 세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획득의석수가 기존의 반 또는 그 이하를 밑돌은 이유는 민주당의 야당으로서의 성격이 이들 정당과 중복되는 가운데 민주당에게는 신당으로서의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무당파층의 투표에 대해 조사한 것을 보면, 사민당이나 신당사키가케에의 지지가 민주당을 물론이고 신진당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91]

이상에서 검토한 제41회 중의원 총선거 결과는 지난 1993년의 획득의석수를 넘어섰다는 점에서는 일본 국민 및 유권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 수치가 종전에 자민당이 획득했던 것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투표율에 있어서도 저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시모토라는 대응방안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은 여전히 유권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받았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자민당의 이러한 부진은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정치부패와 관련된 자민당의 이미지가 여전히 불식되지 않았다거나 탈당한 인사들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다거나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라는 새로운 제도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거나 하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시모토와 같이 파벌영수가 아닌, 국민적으로 인기를 얻은 정치가를 수상으로 앞세워 선거에 임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민당의 새로운 대응방식을 보여주었다

91) 『朝日新聞』, 1996년 10월 21일자, p. 3을 참조 바람.

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즉, 이후에 고이즈미 수상이나 아베 수상에 의해 활용되는 포퓰리즘적 전략 및 대응방식의 선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92] 물론 이러한 방식의 선구는 나카소네 수상에 의한 '대통령과 같은 수상직(Presidential Primiership)' 수행이라고 하겠는데,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라는 새로운 제도 하에서 자민당의 색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92) 고이즈미 수상의 포퓰리즘적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면우, 『포퓰리스트 리더 – 일본은 왜 고이즈미를 선택했는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6); 大嶽秀夫, 日本型ポピュリズム: 政治への期待と幻滅, (東京: 中央公論社, 2003).

제5장

마무리: 일본 보수주의의 저력은 어디에 있는가

이상에서 자민당이 당면한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대응이 성공적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본 연구에서 자민당의 위기대응과 그 성공여부를 검토한 이유는 서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전의 "일본 보수주의 분석"(2017)에서 자민당 및 일본 보수주의의 힘 또는 저력으로 자민당이 보여주는 유연성, 즉 위기에 현실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과 그러한 자민당의 대응에 대해서 호응하는 국가주의적 전통의 유권자를 제시한 것을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간략히 정리, 검토한다.

1. 저력으로서의 자민당 유연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기시내각에서 발생한 안보투쟁이라는 위기, 다나카 내각에서 발생한 '다나카 금맥문제'라는 정치스캔들, 다케시다 내각과 미야자와 내각에서 발생한 '리쿠르트'사건과 '동경 사가와규빈'사건, 그리고 1993년의 중의원선거패배에 따른 야당으로의 전락이라는 다섯 개 사례를 가지고 검토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례인 기시 내각의 안보투쟁이라는 위기와 관련하여 우선 이러한 위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는지, 자민당이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택한 이케다 내각의 출범과 '소득배증'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자민당의 대응에 대해서 국민 및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검토했다.

다른 네 개의 사례에 있어서도 자민당의 위기상황, 그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중의원 총선거를 통한 유권자의 평가를 검토하는 수순을

밟았는데, 본 장에서는 마무리 차원에서 자민당의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에 대한 것과 관련하여 상기한 다섯 개 사례가 제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한다.

첫 번째로 검토할 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민당의 힘이 위기에 유연하게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있다는 지적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유연하고 현실적인 대응에 당내합의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물음이라고 하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긍정이나 부정이라는 어느 하나로 답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그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것인가 하는 점은 당시의 파벌역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일안보조약의 개정을 추구한 기시 내각이 당면했던 안보투쟁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자민당은 조약개정의 달성 후에 기시 내각의 총사퇴라는 대책으로 위기를 우선적으로 무마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보투쟁이라는 정치적 불안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소득배증' 정책을 주장했던 이케다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달리 말하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케다의 총재당선은 파벌역학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그에 의한 '소득배증' 정책의 도입도 그의 당선에 따른 부수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의 기시 수상이나 자민당 집행부가 안보투쟁이라는 정치적 불안을 극복하고자 좀더 온건한 인물을 의중에 두고 그것을 위해 대화에 의한 총재선출방식을 검토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중의 인물은 이케다가 아닌 오오노(大野)와 같은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다. 기시 수상 등이 후계로서 이케다를 의중에 두지 않았던 것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안보투쟁에 의해 사퇴해야 하는 기시 수상으로서는 퇴임 후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좀더 수월한 사람을

선호했을 수도 있다. 또한 이케다는 통상대신으로서 안보투쟁에 대해서 자위대의 출동과 같은 강력한 입장을 유지했었는데, 이에 따라 안보투쟁의 여파를 잠재우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었을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이케다가 평소 자신의 지론이기는 해도 '소득배증'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여론을 일신하고 선거에서도 대승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현실주의적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민당의 유연성으로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는 자민당의 운용에 있어서 파벌역학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러한 다양한 성향의 리더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민당의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이처럼 안보투쟁이라는 위기가 이케다의 선출과 그에 따른 '소득배증' 정책이라는 대응으로 연결되는 데에 있어서는 당내합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파벌역학에 의한 것이었고, 따라서 이는 자민당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고 할 수는 없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반면에 두 번째 사례인 다나카 금맥문제라는 위기와 그에 대한 자민당의 대응과정은 좀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나카 금맥문제라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자민당은 다시금 다나카 수상의 사임과 그에 따른 리더십 교체라는 대응책을 추구했다. 그 대응책이 시이나재정을 통해서 평소 정치윤리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미스터 클린으로 불리운 미키라는 선택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은 일견 위기를 맞이한 자민당이 합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지만, 여기에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서가 붙는다.

첫째는 안보투쟁 후 사임하는 기시 수상이 대화에 의한 총재선출을 좀더 온화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을 고려했던 것처럼, 다나카 수상도 퇴임에 임하면서 시이나 부총재를 후임으로 먼저 생각했던 것이다. 시이나 부총재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는 불문

가지인데, 시이나가 후계요구를 거부하고 조정역으로 돌아서면서 시이나 재정이라는 과정이 진행된 경위가 있다.

둘째는 시이나 재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는 인물이 있었다는 점이다. 오히라가 그러한 인문이었는데, 이케다파를 물려받은 오히라는 이케다처럼 시이나 재정과 같은 대화에 의한 총재선출 보다는 공식선거를 주장했던 것인데 그것이 이케다의 시대와는 달리 통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셋째는 시이나 역시 중재역을 맡았지만 자신과 같은 원로들이 잠정적으로 정권을 담당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구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반발이 오히라에 의해 강하게 제기됨에 그러한 구상은 좌절됐는데, 이는 곧 미키라는 중재안 역시 결국 절충안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미키라는 선택지가 있었다는 것은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민당의 저력이 다양한 성향의 리더를 포함하는 것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여기서 이케다의 경우에 성공했던 공식선출방식이 오히라에게 있어서는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이케다와 오히라의 정치력 차이라고 하면 간단한 것이겠지만, 여기에는 이에 더해 당시의 파벌역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즉, 오히라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라이벌인 후쿠다가 있었다는 점이 이케다가 처했던 상황과는 달랐다는 점이다. 이케다의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시는 이미 수상직에서 물러난 상황이었다.

이처럼 자민당 내에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합의가능성은 당시의 파벌역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자민당이 위기국면을 현실적이고도 유연한 대응책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는 '리쿠르트'사건의 후유증을 제2의 미키라고 할 수 있는 가이후라는 선택으로 극복한 것에서도 나타나지만, 그 이상으로 야당으로의 전락이라는 최대의 위기를

그러한 위기가 없었다면 생각지도 못했을, 오랫동안의 숙적이었던 일본사회당과 연립구성이라는 대책으로 극복한 것에서 알 수 있다고 하겠다.

2. 저력으로서의 보수주의적 일본 유권자 평가

두 번째로 검토할 사항은 이러한 대응책이 효과를 발휘했는가 하는 점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 유권자들이 자민당의 대응책을 선거에서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 역시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안보투쟁이라는 정치적 위기에 대해 이케다라는 선택과 그에 의한 '소득배증'정책이라는 대응책을 추진한 자민당에 대한 1960년의 중의원 총선거 결과는 자민당의 대승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케다라는 선택이 자민당의 의도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자민당에 대해 긍정적인 용인의 사인을 보냈다는 점에서 효과는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다나카 금맥문제'에 대한 미키라는 대응책과 '리쿠르트'사건에 대한 가이후라는 대응책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미키 내각 하에서 진행된 1976년의 중의원 총선거에서는 자민당이 대패하는 결과가 나왔고, 가이후 내각 하에서 진행된 1990년의 중의원 총선거에서는 자민당의 승리라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 물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리더십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1976년의 선거에서는 미키 수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나카 수상과 연관된 또 다른 정치스캔들인 록히드사건으로 비판이 강했지만, 1990년의 선거에서는 '동경 사가와규빈'사건은 아직 잠재된 상황이어서 문제시되지 않았다. 경제상황도 가이후 수상의 경우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복합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언급한 네 건의 사례에서 일본유권자들이 투표에 있어서 특별히 보수주의적 성향을 보인

다는 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일본의 유권자들이 50년대 후반에 이후에 다시금 보수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은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93] 즉, 60년대의 경제성장이 가져온 공해문제 등에 반발해 혁신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등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성향들이 70년대 후반부터 감소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보수주의적 성향의 재래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예가 민영화 등의 행정개혁을 주도한 나카소네 수상에 대한 지지였다고 하겠다.

나카소네 수상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소수파벌의 영수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민당 총재 및 수상직에 선출되어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노선을 추구하면서 당시 레이건 미 대통령의 주도 하에 형성된 신냉전의 한 축을 영국의 대처 수상과 함께 담당했었다.[94] 민영화 등의 구조개혁 추진은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었음에도 일본의 유권자들은 나가소네 수상 하에서 진행된 1986년 6월의 제38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300의석이라는 자민당 형성후의 최고결과로 응답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가화 이후 수상 하에서 진행된 1990년의 선거결과는 이러한 보수주의적 성향의 재래에 따른 효과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후반에 보수주의적 유권자가 증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경제위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한다.[95]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자 그동안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고 유지했던 보수정권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즉, 일본의 유권자들은 위기적 상황에서 더욱 보수적 성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는 그렇다면 1993년의 중

93) 70년대 후반의 보수적 경향 강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바람: 內田健三, 白鳥令, 富田信男 編, 『保守回歸: ダブル選擧と民主主義の將來』, (東京: 新評論, 1981).

94) 나카소네 수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함: 川內康範, 『中曾根政治の檢證: 禍いの政治の行方』, (東京: サイマル出版會, 1989).

95) 內田健三, 白鳥令, 富田信男 編, pp. 73-116.

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는 1993년의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해서 야당으로 전락했지만 그럼에도 자민당은 의석수에 있어서 제1당의 위상은 유지했다는 점이다. 즉, 자민당에 대한 지지기반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둘째는 일본의 중선거구제 하에서의 선거는 정당 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역량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강해서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자민당을 탈당해서 창당해 입후보한 전직 자민당의원들이 그대로 당선되었기에, 즉 자민당의 자객후보전략이 성공하지 못했기에, 그럴 여유도 없었고 해서 대패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당시의 상황이 유권자로 하여금 위기로서 인지될 만큼 급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생각하기 나름일 수는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당시 냉전이 붕괴되는 불안정한 국제정치상황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보통국가론'의 논쟁이 제시하듯이 보수주의적 감성을 자극하는 자민당의 리더가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자민당의 상황은 그러한 전략도 리더도 없었다고 하겠다.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에 밀리기도 했고 그러한 생각을 가진 리더들은 탈당을 감행했던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혼란도 위기로서 받아들임직 하지만 유권자를 그렇게 유도하는 리더는 없었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겠다.

달리 말하면 보수주의적 유권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화와 전략을 가진 리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본 연구의 시발점인 자민당의 힘의 원천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자민당에는 이러한 리더들이 파벌영수 및 중간엘리트 등의 형

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베 수상의 재등장과 그 이후의 장기 집권은 탈냉전기,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불안정성을 높여가는 동북아 정세변화를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아베 수상의 리더십에 기인한바 크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국문〉

강상중, 『내셔널리즘』, 임성모 옮김, (이산, 2004).

고야스 노부쿠니, 『일본 내쇼널리즘 해부』, 송석원 옮김, (그린비, 2007).

김재호·남창희·연현식·이면우·이전원·진창수·하세헌, 『현대일본정치시스템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2).

김호섭·이면우·한상일·이원덕, 『일본우익연구』, (중심, 2000).

세종연구소 편, 『주변 4강 1995년』, (성남: 세종연구소, 1996).

야스마루 요시오, 『천황제 국가의 성립과 종교변혁』, (소화, 2002).

이면우 편, 『55년 체제의 붕괴와 정치변화』,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_____, 『일본의 국가재정립: 정치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이면우, 『일본 보수주의 분석: 아베 재등장의 배경과 일본 정치의 향방』, (성남: 세종연구소, 2017).

_____, 『포퓰리스트 리더: 일본은 왜 고이즈미를 선택했는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6).

_____, 〈일본 정계의 '우익' 성향 강화와 동북아〉, (성남: 세종연구소, 2014).

이면우·이숙종 편, 일본의 정계개편과 정책변화, (성남: 세종연구소, 1996).

〈일어〉

共同通信政治部, 『自民黨大亂: 權力者.最前線の攻防』, (東京: 共同通信, 1990).

管野 完, 『日本會議の研究』, (扶桑社新書, 2016).

広瀬隆, 『私物国家 日本の黒幕の系図』, (光文社、2000).

久保紘之, 『田中角榮とその弟子たち: 日本權力構造の悲劇, (東京: 文藝春秋, 1995).

久保亘, 『連立政權の眞實,』 (東京: 讀賣新聞社, 1998).

菊池正史, 『安倍晉三 '保守'の正體,』 (東京: 文春新書, 2017).

內田健三, 白鳥令, 富田信男 編,『保守回歸: ダブル選擧と民主主義の將來』, (東京: 新評論, 1981).
大嶽秀夫,『日本型ポピュリズム: 政治への期待と幻滅,』, (東京: 中央公論社, 2003).
大嶽秀夫 編,『政界再編の研究: 新選擧制度による總選擧』, (東京: 有斐閣, 1997).
大下英治,『安倍家三代』, (德間書店、2006).
渡邊昭夫 編,『戰後日本の宰相たち』, (東京: 中央公論社, 1995).
藤本一美,『'解散'の政治學』, (東京: 第3文明社, 1996).
本田雅俊,『總理の辭め方』, (東京: PHP新書, 2008).
北岡伸一,『自民黨: 執權黨の38年』, (東京: 讀賣新聞社, 1995).
山口敬之,『總理, (東』京: 幻冬舍, 2016).
山口比呂志,『自民黨2大分裂』, (東京: 德間書店, 1983).
山崎雅弘,『日本會議: 戰前回歸への情念』, (東京: 集英社新書, 2016).
山際澄夫,『安倍晋三と「宰相の資格」』, (小学館, 2006).
森田実,『連立政權: 私の細川內閣論』, (東京: 日本評論社, 1993).
上杉隆,『官邸崩壞 - 安倍政権迷走の一年』, (新潮社, 2007).
上住充弘,『分列政界の見取圖』, (東京: 時事通信社, 1995).
石川真澄,『戰後政治史 新版』, (東京: 岩波新書, 2004).
歲川隆雄, "'竹下·河野' 極祕會談の全容,"『政界往來』, 1995. 9., pp. 11-13.
歲川隆雄, "「直擊インタヒュ-」野中廣務,"『政界往來』, 1996. 4., pp. 8-12.
小野耕二,『日本政治の轉換點』, (東京: 青木書店, 1998).
小野寺研太,『戰後日本の社會思想史』, (東京: 以文社, 2015).
小川榮太郎,『約束の日 - 安倍晋三試論』, 幻冬舍、2012年8月31日.
小澤一郎,『日本改造計劃』, (東京: 講談社, 1993).
松竹伸幸,『'日本會議'史觀の乘り越え方』, (東京: かもがわ出版, 2016).
升味準之輔,『戰後政治(下): 1945-55』,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3).
時事通信社 政治部(編),『'2001'年の首相候補生』, (東京: 時事通信社, 1995), pp. 160-173.
宇治敏彦,『首相列傳: 伊藤博文から小泉純一郎まで』, (東京: 東京書籍, 2002).

伊藤昌裁,『新.自民黨戰國史』,(東京: 朝日ソノファマ, 1983).
田母神俊雄,『なぜ朝日新聞はかくも安倍晋三を憎むのか』,(東京: 飛鳥新社, 2014).
田中國夫,『一寸先の闇』,(東京: 共同通信社, 1983).
田中愛治,"「五五年體制」の崩壞とシステム·サポートの繼續: 有權者と國會議員の意識構造の乖離,"『レヴアイアサン』, No.17, 1995, pp. 52-83.
早野透,『日本政治の決算: 角榮 vs 小泉』,(東京: 講談社, 2003).
佐高 信,『自民黨と創価學會』,(東京: 集英社新書, 2016).
佐藤誠三郎, 松崎哲久,『自民黨政權』,(東京: 中央公論社, 1986).
竹下登,『 證言 保守政權』,(東京: 讀賣新聞社, 1991).
川內康範,『中曾根政治の檢證: 禍いの政治の行方』,(東京: サイマル出版會, 1989).
八代尚宏,『新自由主義の復権: 日本経済はなぜ停』, 滯しているのか. (東京: 中央公論新社, 2001).
俵義文·魚住昭·横田一·佐高信, '週刊金曜日' 取材班,『安倍晋三の本性』,(동경: 株式会社 金曜日, 2006).
後藤田正晴,『情と理: 後藤田正晴回顧錄 下』,(東京: 講談社, 1998).

〈영어〉

Calder, Kent E., *Crisis and Compensation: Public Policy and Political Stability in Japan*, 1949-1986, (Princeton Univeristy Press, 1988).
Hrebenar Ronald J., ed., *The Japanese Party System*, (Boulder, Colo.: Westview, 1986).
Hrebenar, Ronald J. *Japan's New Party System*, (Westview Press, 2000).
John C. Campbell, *How Policies Change: The Japanese Goverment and the Aging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Johnson C.,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Merilee S. Grindle and John W. Thomas, *Public Choices and Policy Change: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in Developing Countries*, (Baltimore, M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1).

Muramatsu Michio and Ellis Krauss, "Bureaucrats and Politicians in Policymaking: The Case of Japa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8, no.1 (March 1984), pp. 126-46.

Pempel T.J. and Keiichi Tsunekawa, "Corporatism without Labor? The Japanese Anomaly," In *Trends toward Corporatist Intermediation*, ed. by Philippe Schmitter and Gerhard Lehmbruch,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1979).

Richardson, Bradley M. and Scott C. Flanagan, *Politics in Japan*, (Little, Brown, & Company, 1984).

Richardson, Bradley M., *Democracy in Japan*,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89).

Samuels Richard J., *The Business of Japanese Stat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